

#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배정호 편



#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배정호 편



##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인 쇄 처 (주)현대아트컴

ISBN 978-89-8479-624-9 93340

가 격 ₩ 6,500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목차

## 서문

I.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 .....	1
배정호(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II. 독일 통일과 EU .....	13
염돈재(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III. 한국 통일과 미국 .....	37
Ralph Hassig and Kongdan Oh(미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V.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	59
Takashi Inoguchi(일본 니가타현립대학 총장, 동경대학 명예교수)	
V.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향한 경로 관리: 중국적 방법 .....	73
You Ji(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사회과학 및 국제학대학 부교수)	
VI. 한국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및 역할 .....	93
Alexander Panov(러시아 특명전권대사)	
VII.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	109
박영호(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저자이력 .....	12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31



## 표·그림목차

[표 IV-1] 2010년 요미우리신문의 설문조사 .....	65
[표 VII-1] 세계 주요 국가의 GDP 추정치: 2010~2050 .....	115
[그림 VII-1] 통일 비전: G8 선진일류국가 .....	114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재차 통일을 추구하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막대한 통일비용만 생각한 나머지 통일문제에 소극적이다. 특히, 일부 젊은 세대는 분단체제 아래 ‘불안정 평화공존’에 안주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특별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붕괴 중에 있다”고 분석하였듯이, 우리가 더 이상 통일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서는 이와 같은 시대상황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최근 다시 점화되고 있는 통일의 불씨의 의의를 되새기면서,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입장과 역할, 한국과 주변 4국의 전략적 협력 등을 연구 주제로 다루었다.

본 연구서가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데는 통일연구원의 이효민 연구원을 비롯한 고의찬 연구원, 박지숙 연구원, 신은미 연구원 등이 교정 및 편집을 위한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 주었다. 그리고 본 연구사업의 성과물이 영어판으로 출간되는 데에는 통일연구원의 Meredith Rose Shaw 연구원과 이효민 연구원이 정확한 번역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편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연구서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의 전문가, 학생들, 독자들이 한반도의 통일과 가치, 미·일·중·러 등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배정호





# I.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

- GK건설을 지향하여 -



# I.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

## - GK건설을 지향하여 -

배 정 호(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에는 마·일·중·러 세계의 4강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한다. 게다가, 한반도 문제는 남북 양자 간 문제인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국제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면, 한반도는 한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불행한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 즉, 한국과 한민족은 한반도에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한민족은 21세기 ‘선진 강대국 한국(Great Power Korea, GK)’ 건설을 지향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 강대국 한국(GK)’ 건설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의해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최근 다시 점화되고 있는 통일의 불씨의 의의를 되새기면서,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고찰한다.

### 1. 한반도 통일 지향의 불씨 점화

한국의 50·60·70대는 냉전 구도 속에서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통일을 매우 중요한 민족적 가치로 삼았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 이후, 적지 않은 국민들이 통일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남북통일을 두려워하고 회피하였다. 이들은 단기적 차원의 안일을 위해 통일보다 남북한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둔 정책을 지지하였다.

햇볕정책의 주도 그룹은 북한의 체제수호와 핵보유 전략, 대남전략과 민족공조전략 등을 간과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 등을 외치며, 북한에 약 70억 달러 상당의 현금·현물을 지원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감상적 민족주의에 젖어 한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섬유 수십Kg을 북한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남북관계는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등에 의해 일거에 경색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였다. 즉, 남북관계는 언제, 어떤 사건에 의해 경색되고, 냉각되며, 악화될 지 모르는, 불확실성·불안정성 등이 내포된 신뢰가 매우 취약한 관계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이념의 산물’이 아니라 ‘실용의 산물’이라고 인식하고, 남북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하며 통일을 지향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재차 통일 지향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막대한 통일비용만 생각한 나머지 통일문제에 소극적이다. 특히, 일부 젊은 세대는 ‘독일통일과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때문에 ‘통일’보다 ‘분단체제 아래의 불안정 평화공존’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교체가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 북한의 경제난과 암울한 장래,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중국의 국익과 ‘일방적 북한 감싸기’ 등으로 더 이상 통일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한국민은 재차 점화되고 있는 통일 지향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 2.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늦어지면

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할 경우, 시간의 흐름과 함께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통일의 장애요소도 커진다. 즉,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반도의 통일은 어려워지고, 통일비용도 증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통일비용 등 통일에 뒤따르는 다소의 초기 진통을 두려워하여 통일을 외면하고 소극적일 때, 한반도는 분단에 의한 발전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엄청난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전략적으로 집중투자하고 있다. 통일이 늦어지고, 김정은 체제가 계속해서 선군을 앞세우며 개혁·개방을 외면할 경우, 북한의 광물자원은 중국으로 유출되며 고갈될 것이다. 이후, 뒤늦게 통일이 된다 해도 통일비용 충당과 한반도 도약의 주요한 밑거름이 될 북한의 광물자원은 고갈되고, 북한은 ‘빈 깡통’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정책 전환 및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난이 지속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 속에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특히, 평양, 개성 등 몇몇 곳을 제외한 지방의 북한 어린학생들은 초등학교 교육도 받게 어렵게 될 것이다. 문맹률의 증가에 의해 북

한 노동력의 질은 아주 떨어질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정서와 지력(知力)은 극도로 피폐해질 것이다. 통일비용 충당과 한반도의 도약의 주요한 추동력이 될 북한 노동력이 질적·양적으로 저하되는 것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민족적 차원의 큰 손실이다.

따라서 셋째, 분단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 분단에 의한 제약 때문에 발전의 한계는 물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양질의 노동력 부족으로 현재의 경제력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젊은층의 징병제 군복무는 양질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늦어지고, 한국이 분단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힐 경우, 향후 한국은 21세기 ‘선진 강대국(Great Power Korea, GK)’로의 도약은커녕, 미국·중국·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국가(Sandwich Korea, SK)’로 전락되는 신세를 모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즉, 통일은 가능한 한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필자는 ‘통일은 가능한 한 빠르게, 통합은 점진적으로 할 것’을 주장한다.

### 3. 선진 강대국(GK)으로의 도약, 발전

모두에 언급한 바 있듯이,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에는 마·일·중·러 세계의 4강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전략적 환경 때문에 한반도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 중견국(middle power)이나 강소국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며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2011년 10월 한국을 방문한 국제정치학의 대가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는 한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부상으로 지정학적 위치가 최악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사이의 샌드위치가 되어 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이 그의 저서 *The Next Decade*<sup>1)</sup>에서 강조

1) George Friedman, *The Next Decade: Where We've Been...and Where We're Going* (New York:

한 바와 같이, 향후 10년 즉 ‘대규모 변혁의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민족과 한반도는 의지와 준비 여하에 따라 운명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향후 10년의 변혁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비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선진 강대국(GK)’으로 도약, 발전할 수도 있고, 미국·중국·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국가(SK)’로 전락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 강대국(GK)으로 도약, 발전하는 것은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이다. 선진 강대국(GK)의 건설을 위해 한민족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분석하였듯이,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에 한반도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광물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여 통일 30~40년 후에 G7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의 재평가』<sup>2)</sup>에서는 북한의 천연자원과 경쟁력 있는 양질의 노동력에 주목하여 한국의 기술과 자금이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과 결합하여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통일한국은 30~40년 사이 GDP가 미국을 제외한 일본·독일·프랑스 등 G7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광물자원의 97%, 희토류 2,300톤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북한 지역에는 잠재 매장 가치 약 7천조 원대로 추정되는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실제로 북한지역에는 남한의 주요 수입광물인 철, 금, 구리 등이 다량 매장되어 있고, 희토류는 약 2,000만 톤 매장되어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1위이고,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의 매장량도 세계 10위 이내이다.

이처럼, 북한 지역의 광물자원은 한민족과 한반도의 커다란 자산이다. 북한 지역의 광물 자원은 통일과정에서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및 통일비용 충당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다. 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선진강대국(GK)으로의 도약, 발전을 추구하는 데 경제적 기반이 되는 귀중한 민족적 자산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체제전환 및 산업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통일경제의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교육을 통하여 정서와 지력(知力)을 회복하며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남한의 주민들은 새로운 북한 시장의 확보로 인해 젊은 세대의 취업 문제는 물론, 장·노년 세대의 취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장·노년 산업화 세대의 경험과 경륜은 북한지역의 체제전환 및 산업화에 매우 유효하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2011).

2) Goohe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September 21, 2009).

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민은 분단과 통일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역사의식과 시대 정신을 가지고 21세기 선진강대국(GK)으로의 도약, 발전을 지향하여 통일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민족사적 차원에서 통일의 가치는 한반도와 한민족을 분단 고통으로 해방시키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일 뿐 아니라 선진강대국(GK)으로의 도약, 발전을 이루하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4. 동북아 평화·번영의 결정적 촉진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고, 게다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다. 즉, 한반도 문제는 남북 양자 간 문제인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국제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원심력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동북아 지역이 강대국의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등과 대립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반도에 구심력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에 의해 그만큼 동북아 전략환경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전략환경의 안정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치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평화·번영 및 공동체의 건설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 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이용 등을 주장하며 핵보유국을 지향해 핵개발을 전개해 오고 있다. 따라서, 미·일·중·러 등 동북아지역의 관련 국가들은 북한과의 양자대화, 6자회담 등을 통하여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중·러의 적지 않은 안보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을 개발할 만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 6자회담의 한계론 또는 무용론 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미·일·중·러의 적지 않은 안보전문가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해 부정적 또는 신중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핵 문제는 동북아 전략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는데, 소형화·경량화와 더불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될 경우, 미국의 대북한 핵 억지력을 한계에 직면하도록 하면서 동북아 안보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즉, 미국의 확장 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에서 미군의 전술 핵 재반입, 핵무장 등의 주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또한 안보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 주도의 통일에 의해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통일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통해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나. 동북아경제공동체 및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의 결정적인 전기

한반도는 지경학적·지문화적으로 동북아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며 세계의 주요 간선 항로(Main Trunk Route)상에 위치해 있고, 서울은 동북아 주요도시 즉 도쿄, 베이징, 상하이, 블라디보스톡 등 보다 다른 도시에 최단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중심적 위치에 있다. 즉 ‘동아시아의 십자로’이자 ‘전략적 관문’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가진 한반도는 싱가포르, 홍콩 등보다 월등히 높은 지경학적, 지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동북아지역의 핵심적 허브(Hub)로서 기여할 것이다. 즉, 한반도는 사람, 물자, 문화가 모여서 전파되는 물류 중추, 정보네트워크 중추, 비즈니스·금융 중추, 문화교류의 중추 등의 역할을 하며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전개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공조를 중시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과 주변국가들과의 상호이해와 ‘국익의 공통분모’의 확대를 위하여 상생의 전략(win-win strategy)으로서 ‘한반도-동북아 연계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sup>3)</sup>

한반도 경영시대의 개막으로 남북한 철도가 연결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 해운, 항공 등

3)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과 함께 운송망을 다양화시키면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R) 등과 연계되어 물류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한반도-동북아 대륙-유럽대륙을 연결시킬 것이고, 경제교류, 인적 교류, 문화교류 등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한국 주도의 통일에 의해 북한 지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인권존중 등이 실현되는 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한반도는 시베리아 개발, 한반도와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 두만강 유역의 초국경 연계 개발 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면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제협력은 인적, 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요컨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경제협력 및 교류, 인적 교류, 문화교류 등을 활성화시켜 동북아경제공동체,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의 결정적인 전기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 5. 통일대비

통일대비와 관련, 통일 및 통합방안, 통일재원 등의 마련과 더불어 한국민의 통일과 선진강대국(GK)의 건설을 지향한 각오와 강인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가. 한민족의 강인한 의지

한국민, 한민족사의 차원에서 선진강대국(GK)의 건설,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번영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통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 변혁기에, 한국민은 위기와 기회의 전환기적 기로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른 통일, 점진적 통합’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민은 국가의 역지력 증강을 통하여 북한의 도발, 대남전략과 남남갈등 추구 등에 대응하여야 하고, 아울러 통일 선진강대국(GK)의 건설을 위한 대전략과 함께 ‘빠른 통일과 점진적 통합’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민은 무엇보다도 한국민의 통일과 선진강대국(GK)의 건설을 지향한 각오와 강인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민의 강인한 의지야말로 통일 대업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첫째, 통일과 선진강대국(GK)의 건설에 대한 한국민의 강인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남남갈등의 소용돌이를 극복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북한 문제

를 둘러싸고 이념갈등을 겪고 있고,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갈등의 증폭을 전략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6월의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의 정치적 승리를 위하여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며 남남갈등을 피한 바 있다. 따라서 2012년 대선 정국에서도 북한정권에 우호적인 세력의 정권 장악을 위해 전략적으로 위기감의 조성을 피하며 전략적인 도발을 치밀하게 감행할 수 있다. 북한정권에 우호적인 진보·좌파 성향의 정권 장악은 북한 지도부가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북한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유통일과 선진강대국(GK)의 건설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재원의 마련이 가능하다. 통일재원 마련은 바로 현시점을 위한 것이기라기 보다는, 후세대와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며 미래를 위한 역사적 대비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통일과 선진강대국(GK)의 건설에 대한 한국민의 강인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통일세의 시행 등 통일재원 마련이 순조롭게 전개될 수 있다.

셋째, 주변국들의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 통일과 선진강대국(GK)의 건설에 대한 한국민의 의지와 열정이 취약할 경우, 한반도의 21세기 발전을 향한 응집력도 약화될 수 있다. 즉, 한반도에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주변 열강의 국익과 이해관계에 이끌려 갈 수 있다. 주변 열강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통일과 선진강대국(GK)의 건설에 대한 한국민의 의지와 열정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통일비용의 최소화, 통일직후의 혼란 극소화 등을 위한 통일 대전략이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다. 통일과 선진강대국(GK)의 건설에 대한 한국민의 의지와 열정이 취약할 경우, 통일 문제는 '정책 이슈'가 아닌 '정치 이슈'가 되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용될 것이다.

요컨대, 통일과 선진강대국(GK)의 건설에 대한 한국민의 강인한 의지가 뒷받침될 경우, 북한문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들이 통일과 선진강대국(GK)의 건설을 지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해소될 것이다.

## 나.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한데, 적지 않은 한국민들은 숫자상으로 제시되는 막대

한 통일비용만을 보고 통일에 신중하거나 주저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이와 같은 성향의 한국민들은 현재 자신에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

통일비용을 생각할 때, 국민들은 먼저 분단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한국민들은 1948년 이후 분단체제에서 적응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밑빠진 독의 물붓기’식의 소모비용인 분단비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비용의 특성은 비생산적이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못하며, 통일 즉시 사라지는 비용이다.

분단비용의 주요 사례로는 ▲ 남남갈등(이념갈등) 등에 의한 국민적 에너지 소모, 갈등 비용 ▲ 북한의 위협에 따른 ‘모든’ 젊은 세대의 ‘의무적’ 군복무 ▲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전력증강으로 인한 21세기형 전력 증강의 한계 ▲ 남북간의 불안정한 평화 ▲ 남한의 ‘섬 아닌 섬’화로 인해 대륙진출의 한계 등이 있다.

또, 향후 장기간 분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인해 젊은 양질의 노동력의 절대 부족 등 때문에 현재의 경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석이 있다.<sup>4)</sup> 따라서 통일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 확보, 분단으로 인한 ‘모든’ 젊은 세대의 ‘의무적’ 군복무와 노동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분단에 의해 지불되는 비용과 통일편익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비용의 계산시에는 분단비용, 통일을 통해 얻게 되는 많은 통일편익 등을 동시에 생각하여야 한다(아래 참조).

#### 순수 통일비용 계산

$$\text{순수 통일비용} = \text{총통일비용} - \text{분단비용} - \text{통일편익}$$

통일비용은 ▲ 통일의 시기와 통일방안, ▲ 통합방식 등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 또, 초기 통일비용은 위기관리 비용일 뿐만 아니라 북한 개발비용이기도 하다. 북한 개발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투자비용이 되기 때문에, 통일 후, 한민족은 독일처럼 많은 통일편익을 얻을 수 있다.

통일비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통일에 따르는 혼란 및 후유증 등을 가능한 한 극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통일은 빠르게’하고, ‘통합은 점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September 21, 2009).

## 참고문헌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Friedman, George. *The Next Decade: Where We've Been...and Where We're Going*.  
New York: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2011.

Kwon, Gooho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September 21, 2009.

## II. 독일 통일과 EU



## II. 독일 통일과 EU

염 돈 재(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 1. 머리말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통일외교 문제, 즉 어떻게 하면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관련 4개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독일과는 달리 한민족은 통일을 위해 한반도 관련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이 한반도에 중요한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이들의 태도가 한반도 통일에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까지는 독일통일은 한반도 통일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독일은 「독일조약」에 따라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프랑스·소련·영국 등 2차 대전 전승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던 데다<sup>5)</sup> 프랑스·소련·영국이 독일통일을 승인할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를 얻어 통일을 이룩했고, 통일 후에는 이들 나라들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럽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험이 한국의 통일외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독일통일을 가능케 했던 대외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특히 독일 통일의 중요한 촉진요소가 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외교를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5) 서독은 1952년 서방 3개국과의 조약을 통해 그 동안 제약 되어 온 주권을 회복하는 대신, ‘전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에 관한 사항’은 2차 대전 전승 4대국이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되어 있어 독일통일에는 이들 4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더욱이 서베를린은 서독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 채 미국, 프랑스, 영국군의 점령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2차 대전 전승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 2. 독일의 통일여건과 전승 4대국의 입장과 태도

### 가. 독일의 통일여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동독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1년 후 독일이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국가 중 독일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공산정권이 붕괴직전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도 독일 통일에 비토권을 가진 소련·프랑스·영국 등의 동의를 얻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 보였다. 강력해진 독일은 항상 유럽평화의 위협요인이 되었고 독일통일은 그 동안 이들이 누려온 독일에 대한 특권적 지위의 종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프랑스·영국·소련은 독일통일을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먼저 이들 나라들의 태도 변화 과정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나. 프랑스의 입장

프랑스는 독일통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였다. 2차 대전 종전 후 독일-프랑스 관계는 독일 아테나워 초대 총리와 프랑스 드골 초대 대통령 간의 개인적 친분과 노력으로 어느 때보다 긴밀했으나 독일통일을 반대하는 프랑스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헬무트 콜(Helmut Kohl) 서독총리가 “독일인들은 자결권을 가졌다”고 언급하자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대통령은 유럽공동체(EU) 정상회의를 소집, 콜 총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 해 11월 28일 콜 총리가 「독일과 유럽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계획」(Ten-Point Program for Overcoming the Division of German and Europe)을 발표하자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또 미테랑 대통령은 동독 민주화 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89년 12월 6일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회동한 후 함께 ‘독일의 단독행동’을 경고했고 12월 21일에는 동독을 방문, 프랑스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를 막으려 했다.

프랑스의 이러한 태도는 통일 이후 독일이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 유럽공동체 강화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뿐 아니라 통일비용 부담으로 유럽공동체(EC)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1년 3월

동독 자유선거로 동독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소련이 독일통일을 용인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독일통일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 서독으로부터 유럽통합의 조기 추진 약속을 받아낸 후 독일통일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을 추진한다면 통합유럽의 틀 속에서 통일독일의 힘을 제어하는 ‘결속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고,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의 신속한 달성이 가능하며 통합유럽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 영국의 입장

영국은 평소 서독의 대외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독일통일에 대해서는 프랑스보다 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독일통일 시 유럽에서의 영국의 영향력 감소가 우려되는데다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을 촉진시켜 이를 가급적 지연시키려는 영국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영국은 독일통일을 적극 반대하기 시작했다. 대처 총리(Margaret Thatcher)는 1989년 9월 고르바초프와 만나 독일통일에는 이웃국가들의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1월 17일 부시 대통령에게 독일통일 논의가 성급하게 이루어지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콜 총리의 「10개항 계획」 발표 후에는 “독일통일 문제는 현안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외교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서독에 전달했다. 12월 8일 스트라스부르 EC 정상회담에서는 프랑스에게 함께 노력하여 독일통일을 지연시키자고 제안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 3월 동독선거에서 신속한 통일을 공약한 「독일연맹」(Alliance for Germany)이 승리하고 프랑스가 독일통일에 동의한데다 대처 총리의 유럽통합 반대 정책이 보수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독일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와 함께 소련이 독일통일을 수락하도록 압박하는 노력에 동참하여 체면손상을 다소나마 만회했다.

### 라. 소련의 입장

소련은 2차 대전 전승 4개국 가운데 독일통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나라이며 독일이 중립화되지 않는 한 독일통일을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차 대전 시

2,000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데다 동독이 동·서 대결의 최일선 방어망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9년 10월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동독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도 공산 정권의 붕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동독에서의 시위격화로 독일통일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소련은 2차 대전 종전을 위한 평화회의의 개최, 동서독 문제협의를 위한 전승 4대국 회의와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정상회의의 개최 제의, 통일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요구 등을 통해 독일통일을 지연시키려 했다.

그러나 동독 선거에서 「독일연맹」이 승리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이 함께 소련을 압박하자 통일독일의 오데르-나이세 국경선(Oder- Neisse line) 유지, 통일독일 병력 상한선의 37만 명선 유지, 생화학 무기의 개발 및 보유의 영원한 금지, 대규모 경제원조 제공 등을 약속 받은 후 독일통일을 수락했다.

## 마. 미국의 입장

미국도 1970년대까지는 독일통일이 유럽안정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일통일을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동유럽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자 가장 먼저 독일통일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1989년 5월 워싱턴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독일통일을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10월 24일에는 “독일통일 문제에 대해 일부 유럽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하여 콜 총리가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극적인 통일노력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미국은 콜 총리의 「10개항 계획」 발표 다음날 바로 통일독일의 NATO 및 EC 잔류를 조건으로 독일통일을 적극 지지했으며 그 후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통일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데 노력했다. 소련의 반대 극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서독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치밀하게 추진되었다. 소련이 독일통일을 지연시키기 위해 제의한 4대국 대사회의, CSCE 정상회의 및 2차 대전 종전을 위한 평화회의의 개최 등을 단호히 거부하는 한편, 2+4 회담을 제의하여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또 미국은 고르바초프가 소련 내부의 반발을 극복하고 독일통일을 수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89년 12월 19일 소련 외무장관의 NATO 사령부 초청, 7월 5일

NATO 정상회담에서의 ‘변화된 NATO에 관한 선언’, 7월 9일 G7 정상회담에서의 대소련 경제지원 결의 등은 고르바초프의 국내적 입지 강화를 위해 미국 주도하에 취해진 조치들이다.

### 3. 통일을 위한 서독의 대외전략 및 정책

2차 대전 후 서독의 가장 중요한 대외전략 목표는 주권의 회복, 경제재건 및 분단의 평화적 관리였다. 그리고 서독 기본법에 명시된 ‘통일 명제’는 공식적인 대외정책 목표에서 한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까지는 현실적인 정책목표에서는 사실상 제외되어 있었다. 냉전과 동·서 대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통일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을 외칠수록 통일에서 더욱 멀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독정부는 구체적 통일방안을 가지지도 않았고 통일을 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코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서독정부는 대내외 정책 추진과정에서 통일에 유리한 여건은 하나라도 더 보태고 통일 장애요인은 하나라도 더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왔다.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출범 시, 동서독 지역을 모두 단일 경제단위로 인정받아 1990년 7월 유럽공동체(EC)의 승인절차 없이 동독과의 화폐·경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일을 염두에 둔 노력의 하나였다.

또 2차 대전 후 서독 정부가 추진한 나치범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 친미·친서방 외교노선의 견지, 서유럽과의 결속강화, 동방관계의 개선 등은 통일만을 염두에 둔 정책은 아니었지만 통일문제는 독일의 대외정책에서 항상 중요한 고려대상의 하나였다. 그리고 서독정부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좁게 열려진 통일의 기회를 기민하게 포착,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20세기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독일통일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들을 중심으로 독일의 통일외교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가. 철저한 과거청산

서독 국내정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외정책에서도 과거청산, 특히 나치의 죄과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1,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철저한 과거청산 없이는 주변국의 신뢰확보와 정상적인 대외관계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독의 과거청산은 국내외적으로 잘못된 인정, 처벌·사과·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2차 대전 후 독일은 나치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철저히 사과했다. 서독정부는 매년 이스라엘 국경일에는 나치의 죄과를 사죄했고 바르샤바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Billy Brandt) 서독 총리는 유대인 희생자 추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서독 법정에서 9만 명이 넘는 나치 관계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7천여 건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게 총 1,200억 마르크를 넘는 피해보상을 계속해 왔다.

재발방지 노력은 더욱 철저하게 추진되었다. 프랑스와는 청소년 재단을 만들고 공동 역사교과서를 편찬하여 화해에 노력했다. 나치범죄의 증거가 되는 시설과 증거들은 모두 보존 및 전시하고 학생들에게는 나치의 죄과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진다. 이러한 서독 정부의 노력은 주변국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변국들이 독일통일을 수락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 나. 친미·친서방 노선의 견지

2차 대전 종료 후 서독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주권회복, 경제재건 및 민주제도의 정착이었다. 따라서 초대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총리는 서독이 중립화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소련의 유혹을 거부하고 친미·친서방 노선을 견지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통일 시까지 이어져 왔다.

이 노선에 따라 서독정부는 친서방과 통일은 양립할 수 없다는 민족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5년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고 NATO의 ‘이중결정’(Double Decision)<sup>6)</sup>에 따라 1983년 11월 21일 퍼싱-II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서독 배치를 결정하여 미국 및 서방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 다. 서유럽과의 결속강화 및 유럽통합의 추진

서독은 독일통일 못지않게 서유럽과의 결속과 유럽통합을 중요시해 왔으며<sup>7)</sup> 서독에서는

6)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 유럽배치에 대응하여 소련과 협상을 계속하되 협상 실패 시에는 서방측도 유럽에 Pershing-II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1979년 12월 12일 NATO의 결정을 말한다.

7) 서독 건국 시 제정된 기본법 전문에는 “...민족적, 국가적 통일을 유지하며 또한 통합된 유럽의 평등한

독일통일보다 유럽통합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 왔다. 독일통일은 유럽의 틀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대 아데나워 총리는 유럽통합을 지지할 경우 주권의 회복, 주변국의 우려 해소, 동등한 협상기회 확보, 경제재건 및 대외적 위상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1950년 프랑스 슈망(Robert Schuman) 외무장관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창설 제의에 적극 찬성했으며, 그 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발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서독은 EU 예산의 약 30%를 부담하면서도 “독일적 유럽보다는 유럽적 독일”을 표방하면서 유럽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프랑스가 담당토록 양보했다. 서독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독일통일을 수락토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서독정부는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의 신속한 체결과 통화통합을 약속함으로써 프랑스로 하여금 독일통일을 수락토록 했다. 통일 후 독일은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주변국들의 동의와 축복 속에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 라. 동방관계의 개선

서독 건국 이후 친서방 일변도의 노선을 견지했던 서독의 외교정책은 1967년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서독정부는 1967년 1월 루마니아와의 수교를 계기로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을 포기하여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길을 열었다. 1969년 10월 취임한 브란트 총리는 신동방정책(New Ostpolitik)을 통해 소련, 폴란드, 체코와 ‘동방조약’이라고 지칭되는 불가침 및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하여 동독은 물론, 소련 및 동유럽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가 대폭 개선되었다.

또 서독은 소련이 제안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설립 제의에 적극 호응, 1975년 7월 최종의정서가 체결됨으로써 대소관계 개선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 서기장 취임 이후에는 소련의 개혁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경제지원을 제공, 독·소관계가 대폭 개선되었다.

.....

권리를 가지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결의에 충만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독정부의 동방정책은 미국 및 서방과의 결속의 바탕 위에서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독정부는 서방의 돈독한 신뢰가 있었기에 적극적인 대소접근을 모색할 수 있었고, 서방의 힘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 동등한 입장에서 각종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다.

#### 마. 콜 정부의 기민한 통일외교

전후 서독정부의 철저한 과거청산, 친미·친서방 정책, 유럽과의 긴밀한 결속 및 동방관계 개선노력이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헬무트 콜(Helmut Kohl) 정부가 추진한 기민한 외교노력은 통일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 첫째, 콜 정부는 베를린 장벽 붕괴가 독일인의 민족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흥분된 국민감정을 진정시키는데 주력했다. 대외적으로는 서독정부가 동서독 주민의 민족감정을 부추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소련에 전달하는 한편, 미국을 통해 소련이 군사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서독 정부의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소련과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일 과정을 평화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기여했다.

둘째, 「독일과 유럽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계획」을 발표, 베를린 장벽 붕괴를 통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하면서도 독일통일이 통합유럽의 지붕 밑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약화시켰다.

셋째, 소련의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장벽 직후부터 미국의 요구조건인 통일독일의 NATO 잔류를 신속히 수락함으로써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콜 정부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모든 계획을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고 협의함으로써 소련 설득을 위한 공조노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에 대해서는 유럽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함으로써 프랑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넷째, 소련의 요구사항을 과감하고 신속히 수락하여 소련의 신속한 결정을 유도했다. 분단 이전 독일영토의 27%의 포기를 의미하는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의 인정, 통일독일의 병력 상한선의 37만 명으로의 유지, 화생방 무기의 생산·보유 포기, 소련의 동독 주둔군 유지 및 철수 비용과 대규모 경제지원 등은 상당한 모험을 수반하는 정치적 결정들이었다.

## 4. 독일통일과 EU의 발전

### 가. 독일통일과 유럽통합

독일통일을 가장 두려워하고 반대했던 나라들이 유럽국가들이다. 그러나 이제 유럽은 독일통일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을 가속화시켰고 통일독일이 유럽통합과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EU의 모체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을 제의한 것도 독일의 군비증강을 통제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경제중심의 유럽공동체(EC)가 정치적 통합기구인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게 된 것도 통일독일을 유럽연합의 지붕 밑에 놓아두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때 유럽통합에는 프랑스가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그 탄생 배경에는 독일이라는 요인(factor)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나. EU 확대와 발전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 (1) 프랑스

유럽연합의 확대와 발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온 나라는 프랑스이다. 유럽연합의 발전이 통일독일의 패권 추구를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이점도 많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유럽에서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독일과의 협력으로 유럽정세를 안정시키고 영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확대보다는 기존 회원국들 간의 협력심화를 더욱 선호했다.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대는 유럽연합의 결속과 서유럽의 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유럽연합 내부에서의 프랑스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영국

유럽연합 출범 이전 영국은 유럽연합에 참가는 하되 유럽통합을 가급적 지연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유럽연합에 참가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외톨이가 되고, 유럽통합의 심화는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력 확대 계기가 된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동유럽 지역 확대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회원국 확대가 프랑스의 영향력 축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기능 심화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 (3) 독일

독일은 프랑스와 합의한 대로 유럽연합의 강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독일의 패권추구를 두려워하는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유럽의 통합이 심화될수록 독일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본질적으로 유럽에서 안정 세력이라기보다는 불안정 세력으로 인식되어 왔고, 통일된 독일은 유럽 속의 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였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통일독일이 과거의 팽창정책을 추구할 가능성, 완전한 주권회복에 따른 폭넓은 자율권의 행사와 영향력의 증대, 국토 및 인구 확대에 따른 경제잠재력의 확충, 냉전종식으로 경제 잠재력이 정치역량 확대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은 통일 후 각료회의의 다수결 원칙과 유럽의회의 권한강화 등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일국가에 차지하는 비중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대부분 수용했다. 또 통일 이후 집행위원의 숫자와 의원 수의 변화, 법관수의 변화 등을 적극 요구하지 않았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안심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영국과 함께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동유럽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야기될 경우 난민들의 독일유입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은 동유럽의 민주주의적, 시장경제적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동유럽 국가들의 EU 편입도 적극 지원해 왔다. 독일은 자국이 동유럽 국가와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 다. 독일통일 후 EU의 발전 내용

독일통일 이후 유럽통합은 더욱 확대 및 심화되었다. 독일통일 당시 15개국이던 회원국이 27개국으로 확대되어 인구 5억 명의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 되었다. 지역적으로는 회원국들이 동유럽 지역으로 확대되어 전 유럽을 포괄하는 거대 기구가 되었다.

통합내용도 대폭 심화되었다. 1992년 2월 7일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1993년 11월 1일 유럽연합(EU)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어서 통화통합도 이루어져 2002년부터 유로화가 각 회원국에서 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또 유럽연합은 1993년 이후 공동 대외 및 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D)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조약(The Treaty of Lisbon)에 따라 「유럽연합 대외문제 및 안보정책 고등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를 임명하여 보다 적극적인 평화 및 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EU 기동타격대를 구성하여 놓고 있다. 이제 EU는 단순한 경제협력 기구에서 벗어나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기구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 라. 유럽통합의 성공 배경

유럽통합은 그 모체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출범 당시부터 독일의 제어에 주목표를 두었고, EU의 출범도 독일통일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지역은 그 외에도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유럽은 기독교 문명을 매개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통합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둘째, 절실한 통합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ASEAN) 등 지역별로 경제블럭이 형성됨에 따라 이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냉전의 종식으로 국가 간의 갈등해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은 영토분쟁 등 국가 간의 분쟁 현안이 적고 군비경쟁이 감소되고 민족주의가 퇴색하는 경향이어서 통합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었다. 넷째, 유럽은 좁은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갈등과 협력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통합욕구가 높았다. 다섯째, 유럽에는 처칠, 드골, 아테나워, 미테랑, 콜과 같은 신뢰받는 지도자들이 있고 이들이 통합에 적극 노력했기 때문에 통합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 마. EU의 발전과 통일독일의 역할

### (1) 유럽통합의 촉진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을 촉진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독일통일이 불가피하다고 판

단되자 프랑스는 통합유럽의 틀 속에서 독일을 제어하기 위해 유럽통합을 서둘러 추진했다. 또 서독은 독일통일에 대한 2차 대전 전승 4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유럽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함으로써 유럽통합 노력은 추동력을 얻게 되었다.

통일독일은 유럽연합의 발전에도 가장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독일은 주변국들을 우려를 감안, 유럽통합의 주도권을 프랑스에 넘겨주고 양보와 적극적 노력으로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로화의 출범은 독일의 마르크화(Deutsch Mark) 포기로 가능해졌다. 독일은 유럽연합에 재정적으로도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유럽연합 총 예산의 21.11%를 부담하고 있고 유럽재정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 4,400억 유로 가운데 독일 27.13%, 프랑스 20.38%, 이탈리아 17.91%로 독일이 가장 많은 출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막강한 경제력이 EU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유럽의 평화와 번영 심화에 기여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을 계기로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도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 유럽연합이 독일의 적극적 지원으로 그리스 등 서유럽의 경제취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난민의 유입, 내전 및 지역분쟁 등 역내 안보위협 요인들을 감소되어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과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독일이 주도한 것으로, EU의 동유럽 확대는 모든 유럽국가들이 EU의 틀 속에서 공동의 안보 및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서유럽은 동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동유럽은 서유럽의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상품시장을 넓힐 수 있게 되어 유럽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 (3) 냉전의 종식을 촉진

독일통일은 동유럽 지역의 민주화와 소련의 변화를 촉진시켜 냉전질서가 종식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냉전질서의 종식으로 동유럽 지역은 민주정치 지역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는 민주제도와 평화, 그리고 국제협력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통일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은 러시아의 개혁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 (4) 동·서 유럽의 통합을 촉진

독일통일과 동유럽 국가의 민주화로 동·서독을 경계로 분단되어 있던 유럽이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동유럽 지역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유럽지역 전체의 안보와 평화가 증진되었다.

또 독일이 가장 많은 출자금을 부담하는 EU의 「폴란드·헝가리 경제재건을 위한 원조계획」(Poland, Hungary Assistance for Economic Restructuring: PHART),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등의 설립은 동·서 유럽의 실질적 통합의 계기가 되고 있다.

#### (5) 인류평화와 번영에 기여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은 인류가 전통적인 갈등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었다. 또 유럽연합은 공동의 안보 및 대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제도 확산과 인류보편의 가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유럽 국가들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지역의 민주화 혁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유럽연합을 통해 공동의 안보 및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독일은 EU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많은 분야에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은 서유럽과 미국을 위시한 대서양 국가들 간의 중재역할을 담당하고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결속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3위의 경제력과 통일 후 더욱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독일통일의 교훈과 시사점

### 가. 2차 대전 전승국의 독일통일 수락 배경

2차 대전 전승국들이 독일통일을 수락하게 된 것은 앞에서 기술한 서독정부의 전략과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요인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그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저지가 불가능했던 동독인의 통일 열풍

독일통일은 동독주민의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의 병합을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동독주민의 통일욕구는 자유에의 갈망과 풍요로운 서독사회에의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했다. 또 1958년 발효된 유럽경제공동체(EEC) 조약에서 동서독을 단일 경제단위로 취급토록 되어 있어 동서독 간의 경제 및 통화통합은 유럽공동체(EU)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어느 나라도 독일통일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어려웠다.

소련이 독일통일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동독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시위의 무력진압이 필요했으나 경제악화와 미국과의 화해체제 손상 우려 때문에 시행이 어려웠다. 프랑스와 영국은 동독주민과 소련의 통일저지 노력에 기대를 걸었으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또 CSCE 규약에 민족자결권이 규정되어 있어 동독주민이 자유선거를 통해 통일을 결정한 이상 독일통일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따라서 독일통일을 수용하면서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 (2) 독일민족과의 미래관계에 대한 고려

프랑스, 영국 및 소련 지도자들이 동독에서의 통일열풍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이후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독일민족과의 미래관계이다. 그들은 독일통일은 불가피하고, 통일독일이 유럽의 가장 강력한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독일민족과 원수가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독일통일을 수락하되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유럽통합의 촉진을 차선책으로 선택했고 소련은 서독의 경제지원으로 보상 받았다. 그러나 치밀한 고려 없이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에 반대한 영국 대처총리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정계를 은퇴했다.

### (3) 패권추구 우려의 해소와 신뢰 확보

유럽 국가들이 독일통일에 반대한 것은 패권적 독일의 등장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독은 철저한 나치과거 청산, 유럽통합 중시정책 및 유럽공동체(EC)에서의 희생적 역할

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분단시 서독정부가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양해 하에 동방정책을 추진했다는 점, 핵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NATO의 이중결정」(NATO's Double Decision)에 따라 퍼싱-II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서독배치를 수용한 것은 미국 등 서방 동맹국들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서독정부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신속히 발표한 정책내용들은 더욱 독일을 신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프랑스와는 유럽통합의 조기추진을 약속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통일독일의 NATO 및 EC 잔류방침을 명확히 전달했으며, 소련에 대해서는 오데르-나이세 국경선 준수, 통일독일 병력상한선의 37만 명 수락, 화생방 무기의 영원한 금지 약속, 대규모 경제지원 제공 등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 (4) 미국, 프랑스 국민의 호의적 태도

분단 당시 서독정부는 주요 국가 국민들의 독일에 대한 인식을 호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우선 나치의 죄과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보상으로 세계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유대인들의 인식을 호전시킬 수 있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추종하는 한편,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각인된 나치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했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청소년 교류재단의 설립, 공동 역사교과서의 편찬, EC에서의 주도적 역할 양보 등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90년 조사에서는 미국 국민 88%가 부시 행정부의 독일통일 지원에 찬성했다. 프랑스도 1989년 11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독일통일에 찬성했다. 그 반면, 영국에서는 응답자의 45%만이 독일통일에 찬성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독일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인식이 정부의 대독일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5) 유럽통합의 조기추진 약속

2차 대전 이후 독일견제를 위한 서구국가들의 노력은 ‘통합을 통한 통제’였다. 따라서 서독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공동체(EC)에 적극 참여 및 기여함으로써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는 프랑스와 유럽통합의 조기추진을 약속함으로써 패권적 독일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

## 나. 독일과 한반도의 대외적 통일여건상의 차이점

### (1)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동의확보 문제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은 독일통일을 위해서는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에는 이러한 대외적 제약이 없어 남북한이 합의하면 주변국의 찬성여부와 상관없이 통일이 가능하다.

### (2) 한국의 상대적 국력과 영향력의 취약성

한국은 서독에 비해 국력과 대외관계 관리능력이 취약하다. 서독은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군사적 잠재력 때문에 주변국들이 독일통일을 바라지 않는 요인이 되었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는 통일에 도움이 되었다.

한반도 주변 4개국은 EU와 함께 세계 최강의 대열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이들에 비해 영토, 인구, 정치·경제·군사력 면에서 현저한 열세에 있다. 따라서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점은 있으나 주변 4개국 간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통일한국이 4개국의 어느 편에 선다 해도 기존의 세력판도를 변화시킬 수 없어 역내 균형자(balancer)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서독에 비해 통일을 위한 대외관계 관리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미·소관계와 미·중관계의 차이점

통일직전 미·소관계는 독일통일에 기여했던 반면, 앞으로의 미·중관계는 한반도 통일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동·서독의 후견국이던 소련과 미국 간의 관계가 대폭 호전되는 과정에 있어 독일통일의 촉진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남북한의 후견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통일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4) 소련·동독 관계와 중국·북한 관계의 차이점

과거 동독의 대 소련 의존도에 비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낮아 중국의 변화가 북한

의 변화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과거 동독은 소련의 후견 역할 철회가 곧바로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데다 중국이 북한정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북한 공산정권의 붕괴나 북한의 태도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 (5) 동북아 지역 통합 및 협력 저해 요인

우선 동북아 지역은 유럽과 통합여건 상의 차이점이 많다. 첫째,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 국가들은 절실한 지역통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교문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는 하나 지역통합 촉진요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셋째, 지역 내에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공산주의 제도가 혼재하고 있어 단일체제로 통합되기가 어렵다. 넷째, 지역통합에 적극적인 신뢰받는 지도자가 없다. 다섯째, 미국·중국·일본·러시아는 세계 최강대국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역내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다.

더욱이 동북아 지역은 상호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네 나라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역내 문제가 전 세계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어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 둘째,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새로운 정세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아편전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강력한 중화건설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역내 정세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 지도자들은 자국 중심주의를 중시하면서 인류보편의 가치 실현을 등한시 하고 있어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셋째, 중국·일본·한국 등 3개국 간에는 영토문제, 과거사 문제, 역사왜곡 문제, 위안부 문제, 납치문제 등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으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경험이 적고 각국 국민들의 민족감정이 높아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핵개발, 대남도발 및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태와 벼랑끝 전술은 중요한 지역정세 불안정요인이 될 뿐 아니라 역내 국가 간의 갈등조장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역내 국가들 간에 경제협력 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무역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항상 잠재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는 지역통합 기구가 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며, EU와 같은 지역통합 노력이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거나 통일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다. 한반도 주변 4개국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

독일은 통일을 위해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한반도 통일 시에는 이러한 제약요인이 없어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은 독일의 경우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과 주변정세 관리능력이 서독에 비해 미약하다는 점과 독일통일 시 주변정세가 호의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반도 주변 4개국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은 2차 대전 전승 4대국에 못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국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통일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긍정적 요인

첫째,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은 북한의 도발억제와 한반도 평화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한반도 적화기도를 무력화시키는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 북·중동맹 관계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호전성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둘째,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은 남북한 간의 극단적 대립과 충돌적 대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남북한은 중무장 상태에서 대립하고 있어 우발적인 충돌이나 충돌적인 대응이 대규모의 군사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은 남북한에 안정감을 주어 비의도적인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중국의 대북지원은 경제난에 따른 북한내부의 혼란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넷째, 중국은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를 완화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대내외 정책을 추진토록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

다섯째,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중관계의 개선은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을 촉진하고 남북한이 서로 상대측 내부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 부정적 요인

첫째, 북·중동맹과 중국의 북한입장 지지와 경제지원이 정통성 없는 북한 공산정권의 붕

괴와 북한의 개혁을 지연시켜 통일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중국의 인권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의 인류보편의 가치 경시가 북한정권의 주민탄압을 정당화시켜주고 북한의 변화를 지연시킨다. 중국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면 북한주민의 인권을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변 4개국 간의 각축이 한반도 정세안정과 통일여건을 악화시킨다. 중국정부가 천안함 사태 후 서해에서 실시된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은 북한에 대해 ‘잘못된 신호’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의 통일을 어렵게 만든다.

다섯째, 중국의 탈북자 관련 정책이 북한주민의 대량 탈출을 막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킨다.

## 라.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첫째, 통일은 북한주민의 자유의사가 통치체제와 지도자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독주민의 통일요구였으며, 주변국들도 동독주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상된다.

둘째, 통일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력신장이라는 점이다. 서독이 프랑스·영국·소련의 반대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국력과 통일독일의 막강한 잠재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2차 대전 전승 3개국 이 끝까지 독일통일에 반대할 수 없었던 데는 독일민족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국력이 신장된다 하더라도 “통일한국이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상대적 국력 열세 때문에 통일한국에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을 위해서는 확고한 외부 지원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적극적 지원은 독일통일을 가능케 한 핵심적 요소가 되었으며, 미국의 지원은 서독이 건국 이후 친미·친서방 정책으로 미국의 확고한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넷째, 평소 통일여건을 꾸준히 축적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서독이 철저한 과거청산, 프랑스와의 돈독한 우호관계 유지, 동방관계의 개선 등을 추진한 것이 통일외교에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다섯째, 2+4회담은 ‘통일의 조장자’가 아닌 ‘형식적 추진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4 회담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주요문제는 양자관계를 통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중요문제 해결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6자회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동북아 지역 통합노력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은 ‘독일제어’를 위한 기제로서 프랑스가 독일통일을 수락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유럽통합은 그 외 분야에서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동북아 지역 통합노력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통합의 성공이 통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도 적다. 다만, 통일독일이 유럽통합과 공동번영에 기여한 내용은 한반도 통일의 이점을 인식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과 정책방향

### (1) 한반도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의 심화

한반도는 독일과는 달리 남북한이 합의할 경우 주변국들의 동의 없이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는 외부세력의 개입이나 방해가 없어야 하고, 주변국들이 지원 시 통일과정이 훨씬 수월해 질 수 있고, 통일 후 통일비용 조달과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도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평소 주변국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례 정상회의와 분야별 협력기구 및 금년 9월 한국 내에 설치된 한·중·일 협력사무국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노력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중·일 3국은 민족의식이 높고 역사인식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 청소년 및 학생들 간의 교류를 체계화하고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통일외교를 추진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한·미동맹과 대중국 우호관계가 충돌할 경우 겪게 될 문제점들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미·중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은 사안별로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와 갈등요인이 가장 적은 나라라는 점과, 핵심 우방의 신뢰를 잃을 때 다른 모든 나라들로부터도 신뢰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3)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이해 제고

한반도 통일은 국제사회와 동북아 지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한민족의 통일로 한반도의 전쟁위험과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이 사라져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도 역내의 가장 중요한 갈등요소가 해소되고 동북아 지역의 수송상의 애로가 타개되어 한반도 주변 반경 1,200km<sup>2</sup> 내에 7억 인구와 6조 달러의 GDP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 통합되어 동북아 지역이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또 강원도와 일본 서북지역을 포괄하는 환동해권 경제협력체, 북한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망의 구축,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를 잇는 경제협력관계의 구축 등이 가능해진다.

주변 4개국 가운데 중국이 누리게 될 편익이 가장 크다. 동북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정세불안 요인이 제거되고 장기적으로는 역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며, ‘독재정권의 부도덕한 후원자’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세계 초강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도덕성과 품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북한 지역과의 경제협력으로 동북3성 개발이 촉진되고 구매력 높은 2,700만 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세계 지도국가로서 미국이 누리게 될 편익도 크다. 동북아 지역 정세 불안요인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위험이 제거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며 ‘한민족 통일의 후원자’ 또는 ‘인류평화의 조장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북한지역 개발로 상품·자본·기술의 수출과 투자 여건이 확대된다.

일본도 한반도 분단의 ‘원인 제공자’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고, 북한지역 개발과 대륙과의 물류망 연결로 투자 및 수출 여건이 호전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 여건이 호전될 수 있다. 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새로운 피랍자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러시아는 잃을 것이 없는 반면, 얻을 것이 가장 많아 ‘한반도 통일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연해주와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한-러 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용 증가로 외화 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 또 한반도와의 물류체제 개선과 북한

지역 개발로 천연가스 등 자원과 상품수출 시장이 확대되며, 한·러관계 강화로 동북아 세력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

#### (4) 언젠가는 당면하게 될 어려운 과제들에 대한 대비책 연구

한반도 통일이 달성되기까지는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다. 첫째, 미국의 대외개입 축소에 따른 대한 방위공약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1969년 발표된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과 같은 정책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충돌로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우호관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할 어려운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가장 가까운 우방과 가장 가깝고 큰 경제 파트너인 ‘전략적 동반자’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 후 주한미군 문제도 중요한 검토대상이다. 중국이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을 환영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있으나 그 가능성을 믿기 어렵고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과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중 교류가 확대될수록 문제 발생 가능성은 많아지게 되며, 더욱이 중국의 관습과 법체계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점도 우려대상이 된다. 서해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과 관련된 우발적 충돌이 군사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양국 네티즌 간의 사소한 충돌이 심각한 감정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III. 한국 통일과 미국



### III. 한국 통일과 미국

Ralph Hassig, Kongdan Oh(미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록 미국이 한국과 오랫동안 안보 동맹이며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한국의 통일에 확실히 개입될 것이라 하더라도, 통일을 위해 준비된 것은 별로 없다. 그 이유를 찾기는 쉽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미루게 되며, 특히 그 어려움이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러하다.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통일이 언제 올 것인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통일의 주요한 방해물인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주민들의 존경도 잃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자원의 대부분을 권력을 유지하는데 쏟았고,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대안에 대해 어떠한 비전도 없기 때문에, 수십년간 그랬던 것처럼 북한정권은 비틀거리며 유지되고 있다. 북한 정권을 대체하거나 권력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정권을 설득할 무엇인가가 발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일어날 것인지 말하기는 어렵다.

일단 북한 정권이 더 이상 통일에 장애가 안 된다면, 고된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그동안 거의 아무도 통일을 열망하지 않았다. 북한 정권, 한국정부 혹은 한국 국민들 대부분, 그리고 북한의 이웃나라들 모두 통일을 열망하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통일에 관하여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만이 통일을 열망한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이 그들의 삶을 더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통일을 이루는 방식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 면에서 굉장히 도전적일 것이라는 것과 국제사회의 중요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대외 정책의 신속한 실행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통일의 최종 형태는 아마도 수년의 시기에 걸쳐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 작업은 많은 비용이 들 것이므로 적어도 단기간에 남한이 그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재정지원이

\* 이 글에 나타난 견해는 필자들의 견해이며 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기구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통일은 동아시아의 정치지형을 바꿀 것이다. 남한은 2천 5백만명의 인구를 더 가진 새로운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대외 정책에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과 훨씬 더 짧은 국경을 접한 러시아는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일본 또한 경제 및 대외정책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들과 여러 고위 관료들은 한국 통일을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자주 내어 왔지만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다. 미국이 통일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확실히 미군은 북한의 핵물질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려 할 것이나, 미국의 개입은 그때의 국제상황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에 좌우될 것이다.

## 1. 통일은 어떤 모습일까

언제 그리고 어떻게 통일이 달성될 것인지는 통일이 지역에 미칠 영향과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역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① 통일과정을 주도하는 모델은 어떤 것인가? ② 어떤 조건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통일을 가져올 것인가? ③ 언제 통일이 올 것인가? ④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 후의 기대요소들은 어떤 것인가? 이다.

### 가. 통일 모델

남북한은 적어도 1970년대부터 계속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통일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겠지만 남북한 각각의 통일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통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처음으로 남북한 사이에서 의미 있는 정부 간 접촉은 1972년 6월에 일어났다. 그 회담 전에는 통일은 평화적 협상보다는 또 다른 한국 전쟁의 결과로서 일어날 것 같았다(비록 1972년에 첫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 북한 정권은 전쟁이 여전히 명백한 가능성으로 남아 있음을 수시로 경고했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 대표들은 세 가지 통일 원칙에 동의했는데 그것들은 북한의 선호도를 충족시켰다. 첫째, 통

일은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미국이 남한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통일은 남북한의 다른(그리고 반대되는) 정치적, 경제적 체제는 당분간 유지하고서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 대단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선언 이후 계속해서 북한은 그들의 남한 국민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음을 상기시켜 왔다.

북한은 이러한 세 원칙에 그들의 다양한 통일 제안을 확장시켜 왔는데, 1993년 김일성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발표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10대 강령에는 비간섭 원칙, 평화통일 원칙, 공존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한국인들에게 애국적으로 민족의(즉, 남한의) 부를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심지어 “위대한 민족의 통일에 기여한 자들은 매우 존경받아야 한다”는 원칙마저 제안하는데 이것은 북한 붕괴시 북한 지도자들을 위한 일종의 보험 정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1991년 ‘기본 합의서’는 1972년 공동 성명의 원칙들을 재확인함으로써 시작되는데, 남북한 화해에 관한 장의 첫 번째 항목에서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다시 서명했다. “남한과 북한은 각자의 체제를 인식하고 존중할 것이다.”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 공동 선언은, 통일 문제는 남북한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며, 남북한의 각각의 통일 계획들은 ‘공통의 요소들’을 가진다는 것 외에 통일과정에 대해 특별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 2007년 10월 4일에 있었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체결에서 발표된 성명은 ‘자주적’ 원칙의 우선이라는 이전 성명의 원칙들을 반복하였고, 남북한은 각자의 내정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재확인하였다.

얼핏 보기에다 그러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의견이 일치된 통일 과정이 어떻게 가까운 미래에 통일을 이루게 할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비록 그것이 한국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걸치레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다. 이러한 통일 과정에 대한 간단한 묘사는 한 민족, 두 국가, 두 체제, 두 정부이다. 만약 두 국가와 두 정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또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한 국가’로서 통일한국을 묘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체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두 정부와 체제가 완전히 다르며, 두 정부가 상대방의 영토에 대한 지배를 주장하면, 그러한 통일 방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북한의 통일 방식은 언제 또는 어떻게 남북한이 중국에는 그들의 체제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숙고하고 있지 않다. 남한의 통일 방식(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에서의 통일 방식)은 먼 미래의 어떤 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의미 있는 통일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 사람들은 통일의 엄청난 부담을

떠안는 것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하게 되었으며,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통째로 흡수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 정부 체제하에서 정치적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추후에 경제적, 사회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단계적 과정을 채택하는 쪽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반부에 통일이 세 단계를 걸쳐 일어날 것을 제안했다.<sup>8)</sup> 첫 번째 단계는 머지않은 장래에 ‘평화공동체’의 형성을 보게 될 것인데, 남북한은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또한 비핵시대가 될 것이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단계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포함하는 것인데 남북한 간 교역은 확대될 것이고 북한의 경제는 개선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강화된 후인 세 번째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남북한은 그들의 체제를 통합하여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이래로 줄곧, 독일 통일 모델은 조건이나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 계획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2011년 독일을 방문하여 통일에 관한 회담을 하였으며, 대통령 자신이 방문했을 때 그는 “남한은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다.<sup>9)</sup> 비록 반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는 하나, 이 판단은 북한 정권을 격노하게 하였으며, 로동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자유 민주 체제 하에서의 재통일’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북한의) 사상과 체제에 위해를 가하고 그들의(남한의) 썩어 빠진 파시스트 지배 체제를 북에까지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다.”<sup>10)</sup>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를 국민들에게 거두어 통일비용에 도움이 되는 기금을 조성하고자 제안했다. 이 제안에 많은 한국의 국민들이 저항했으며, 이들은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한 상황을 모면하도록 하는데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다. 통일세 제안에 대해 북한 정권 또한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북한을 재건하기 위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남한이 언젠가는 그 자신의 정부 하에 남북한을 통일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sup>11)</sup>

8) “ROK President Lee Proposes Three-Step Reunification with DPRK,” 『연합뉴스』(영문판), 2010년 8월 15일. <<http://english.yonhapnews.co.kr>>.

9) “Lee Says S. Korea Should Be Financially Prepared for Unification with N. Korea,” 『연합뉴스』(영문판), 2011년 5월 10일. <<http://english.yonhapnews.co.kr>>.

10) Sim Chol-yong, “Stern, Hard Blow at Traitorous Maneuver,” 『로동신문』(인터넷판), 2011년 6월 5일. <<http://dprkmedia.com>>.

11) 예를 들면, 북한 외무성의 군축평화연구소의 대변인 담화를 들 수 있다: “After inventing ‘unification tax’ which no successive [sic] regimes had ever thought of, the authorities are crying out for raising funds necessary for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조선중앙통신』(영문판), 2011년 9월 5일. <<http://www.kcna.co.jp>>.

북한 사람들은 남한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북한 정부는 그러한 지원이 사적인 후원, 무역, 투자의 형태로만 국한되어 남한 정부에 어떠한 정통성도 부여하지 않기를 원한다.

요약하면 남북한 양측은 통일이 단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도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단계는 남북한이 상징적으로 통일되는 단계이며, 아마도 그러한 상징적 통일에 힘입어 남한이 경제적 원조를 북한에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 남한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하에서 정부와 체제의 궁극적 통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에 의한 점진적 통일과 무력불사용 원칙에 기반한 통일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특정 사건으로 인해 남북한이 급박하게 통합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급변’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북한 당국을 화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재임 동안에는 금기시 되었으며, 최근에는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 나. 통일 시나리오

통일 과정의 최종 상태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하에서의 완전한 통일이다. 즉, 북한의 남한으로의 흡수를 의미한다. 지난 수년간 어떤 시나리오가 통일을 가져올지에 대한 의견이 적지 않았다. 가장 짧은 리스트는 경착륙과 연착륙이라는 두 개의 시나리오이다. 더 긴 리스트는 대개 다음의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① 북한이 전쟁에 패한다. ② 북한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들의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한다(심중팔구 김정일 사후에). ③ 김씨 일가 정권은(김정일 혹은 후계자의 정권 하에서) 당분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섭을 통한 단계적 통일을 선택한다.

통일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결정요소는 현장상황이 어떠한가이다. 전쟁 직후에, 북한의 기반시설은 심하게 훼손될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죽을 것이며 조선 인민군 중남은 군인들은 계속 싸우려 할 것이다. 사회질서의 붕괴나 혁명적 붕괴 직후, 기반시설은 대체로 유지될 것이지만 북한 사회는 전반적인 혼란을 겪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섭을 통한 혹은 단계적 통일에서 일상생활은 다소간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나 북한 사람들과 기반시설에 남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질문의 필요성이 생긴다. 북한 경찰과 군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남한 사람들과 협력할 것인가? 많은 북한 사람

들은 국내에서 이동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국경을 지나 중국이나 남한까지 이동하기를 원하는가? 지방 정부들은 기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국가 및 지방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충분한 음식과 적절한 주거, 의료 혜택과 직업들은 주민들에게 허용될 것인가? 도로나 철도와 같은 물리적 기반 시설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통일이 될 즈음, 주민들의 경제는 얼마나 잘 발달되어져 있을 것인가?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은 통일의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다. 통일 시기(Unification Timing)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찰은 끝나지 않았다. 남한 관리들, 전문가들, 탈북자들과 일반 대중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 2009년부터 통일연구원(KINU)에서는 ‘통일예측시계’를 가동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2010년에는 통일의 시간이 몇 분간 늦추어졌다. 붕괴/흡수의 눈금이 (개연성이 더 적다고 여겨진) 합의 통일의 눈금을 앞지르게 된 것이다.<sup>12)</sup> 하지만 통일이 언제 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근거로서, 이 모든 평가들은 유용성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북한 사회는 여러 해 동안 망가져왔지만, 사회 붕괴나 통일에 관한 합의가 임박하다는 표시는 없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분단국가가 된 이래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협박해 왔으나 전쟁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예측에 관한 중요한 것은 그 예측들이 통일을 위한 준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일이 더 빨리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고,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조치를 덜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인 역사적 예를 들어 보면, 1994년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으며, 미국 정부가 북한에 원조(그리고 경수로 원자로 두기)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게 된 하나의 이유는 경수로가 지어지기 전에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관리들의 기대였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이 제공했다는 경제적 원조나 정치적 인식이 북한 붕괴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약화시켰는지는 알 수 없다.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화두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누구나 예측하듯이, 사람들은 미래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현재의

12) Young-Ho Park and Kim Hyeong Ki,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

조건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소한 조정을 거쳐, 단지 그러한 조건들이 미래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즉,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을 무시한다. 재촉 받을 때,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를 보는 시각이 먼 미래를 보는 시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미래의 한가지 면(예를 들면, 경제)을 설명하는데 다른 면들이 변할 것인지 혹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를 모두 고려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미래는 일종의 터널시각(tunnel vision)으로 보여 진다는 것은 항상 사실이다.

만약 사람들이 미래를 연구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면, 미래가 어떤 것인지 예측하는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유용한 대안은 한국통일과 유사한 현재나 과거의 상황들을 보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두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나름의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나 유추를 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은 먼 미래를 연구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보다 더 적은 듯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교할 만한 상황은 독일로, 한국통일이 어떠한지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독일의 통일사례가 자주 연구되는지 알 수 있다. 또 다른 비교할 만한 근거는 베트남 통일이다. 독일의 경우 민주주의 하에서 흡수 통일의 유용한 모델을 제공하는 반면 베트남 모델은 북한이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 정책들을 계속 하면서 남북한이 점차적으로 단계적 통일을 경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를 예측하는데 더 유용할 것이다.

이런 모든 점들을 기반으로, 북한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남한의 일반 대중들도 대체로 통일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면, 2010년 8월에 접촉했던 한국인들의 임의 샘플에서는 통일 시기에 관해 8%는 5년 이내에, 27%는 10년 이내에, 23%는 20년 이내에, 28%는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sup>13)</sup> 2011년 8월에 실시한 통계 조사에서는 58%가 20년 이내에, 19%는 20년과 30년 사이에, 16%는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통일을 예측했으며 7%는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sup>14)</sup> 경제 전문가 20인은 2010년에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아무도 다음 5년 이내에 통일을 기대하지 않지만 95%는 30년 이내에 통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sup>15)</sup>

13) 한선재단이 주최한 2010년 심포지엄에서의 이각범 교수의 발표문. 이에 관해서는 『데일리NK』(영문판), 2010년 9월 17일, <<http://www.dailynk.com>> 참조.

14) 『KBS』, 2011년 8월 15일. <<http://www.kbs.co.kr/tv>>.

15) 『연합뉴스』(영문판), 2010년 9월 14일, <<http://english.yonhapnews.co.kr>>.

## 라. 통일 후의 기대

통일이, 특히 흡수통일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통일의 시점에 북한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통일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수준을 보상 받지만 여전히 남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비해 확실히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남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남한 사람들이 그러한 생활비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는가?

통일 시점에 북한의 정보 통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명확하고 완전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것은 동독이 통일 전 여러 해 동안 가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지식이다. 오늘날, 북한 사람들은 이미 상당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만약 현재의 추세가 계속 되고 통일이 십년 혹은 그 이상 지연된다면 통일이 될 즈음에 북한 사람들은 이미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동료 시민들이 훨씬 더 잘사는 것을 볼 때 열등한 생활방식을 참는 것이 어렵다. 한국 통일의 경제적 논리는 남한이 기술과 경영 기법을 제공할 것이고 반면 북한은 천연 자원과 싼 노동을 제공할 것이라고 항상 가정해 왔다. 북한 사람들이 싼 노동을 제공하는데 만족할 것인가? 통일 이전에 숙련된 전문직 직업을 가졌던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서 숙련된 전문직 종사자들이 받는 임금을 벌 것으로 기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만약 북한에서 그만큼 벌 수 없다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비록 생활비가 더 높다 하더라도 남한으로 이주하고 싶어할 것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을 부여받는 것에 관하여, 그들은 김씨 왕조의 정권에 충성하거나 혹은 적어도 복종함으로써 진보할 가능성이 존재했던 50년을 잃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반면, 그들은 북한 미디어에 선전되는 사실에 더 주목하는데, 이는 그들의 경제적 실패가 크게는 자본주의 세력들, 특히 남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효과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동일한 작업에 대한 동일한 보수를 받기를 기대할 것일 뿐만 아니라 보상 또한 기대할 것이다. 2003년에, 북한은 남한사람들은 1945년부터 미국에 의해 그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43조 달러를 지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6)</sup> 그리고 2010년에 조

16) "Tremendous Damage Caused by U.S. Imperialists to S. Korea Estimated," 『조선중앙통신』(영문판) (November 29, 2003), <<http://www.kcna.co.jp>>.

선중앙통신은 미국은 북한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 65조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주장했다.<sup>17)</sup>

## 2. 한국 통일 후의 동아시아

한국 통일은, 비록 정확하게 어떤 변화들이지는 통일의 시기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바꿀 것이다. 만일 통일 과정이 수년이 걸린다면 한국과 국제 사회가 새 질서를 수용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만약 통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단순화하기 위하여, 통일은 사실상 갑자기 일어나며 남한 모델에 기초한 하나의 한국이 되는 것으로 가정해보자.

### 가. 정치적·군사적 환경

통일 후에 동아시아는 독재 정권 하나를 잃고 민주주의 정권 하나를 얻으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독재 정권으로 중국을 남겨두게 된다. 한국은 이제 프랑스와 비슷한 크기가 될 것이며 불편한 관계의 역사를 가진 일본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힘에 필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는 민주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전제에서 그 두 나라의 관계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일종의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을 수용하려 할 수 있는데, 그것에 의해 중국은 비 아시아 세력들이 그 지역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느낄 것이다. 여러 논쟁을 중재할 지역기구의 부재 속에, 동아시아는 생활하기에 어려운 정치적 지역이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한국은 과거의 한국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인구의 3분의 1은 북한 사람들이며 만일 그들이 국민 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정치와 경제의 본질을 바꾸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아주 초기부터, 통일 이전 북한의 정치가들, 관료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그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남한은 이미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유권자가 상당 부분 있어서 통일한국은 사회민주주의로 편향된 정치적 좌파로 옮겨 갈 수 있다.

17) Sam Kim, “N. Korea Demands Massive Compensation from U.S. for 60 Years of Enmity,” 『연합뉴스』(영문판) (June 24, 2010), <<http://english.yonhapnews.co.kr>>.



대부분의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는 통일 후 한국이 북으로부터 물려받은 핵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것이나, 아마도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한국은 핵을 보유한 중국과 핵무기를 재빨리 얻을 수 있는 일본에 직면할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 특히 북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의도를 의심스러워 할 것이며, 한반도의 북쪽 절반에서조차 중국인들은 그다지 인기가 없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핵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일부 한국인들은 이점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에 회의적이며,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 하나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소수 한국인들은 종종 통일한국을 정치적 중립국 즉, 아시아판 스위스로 만들자고 말해왔다. 이것은 또한 북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치체제와 매우 다른 냉전역사를 가진 중국과 서구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미래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고 대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여건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진정한 중립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결정적으로 강등시키고 아마도 중국 그리고 가능하게는 러시아와 안보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주요한 정치적 변화를 구성할 것이다. 하지만, 남한은 이미 무역 관계에서 미국 쪽 보다는 중국 쪽에 더 가깝게 옮겨 갔으므로, 이러한 정치적 재편성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다.

만약 그러한 재편성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동맹으로 남고 싶은 일본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아마도 대만을 제외한 동북아시아의 나머지 지역에서 일본을 정치적 외톨이로 만들 수도 있다.

## 나. 경제적 변화들

통일 후, 나라의 북쪽 절반을 재건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가정하면, 한국 경제는 몇 년간 어려움을 겪겠지만, 동아시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주의 통제 경제 하나를 잃고 더 강력한 시장 경제를 하나 얻게 될 것이다. 통일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은 통일의 시기, 북한의 상황들, 통일과정의 경제적 목표들, 통일이 단계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느냐 아니면 서둘러 강요되어지느냐에 좌우된다. 여러 해 동안 경제학자들은 통일비용에 관한 예측을 해오고 있었으나 의견일치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철도망을 향상시키는 비용에 대해 생각해보자. 비용을 산정할 때, 남한

의 철도망과 유사한 철도망을 목표로 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의 철도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여행하는 것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있어 충분한 목표일 수 있을 것인가? 비용의 차이는 아마도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만약 통일이 오늘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전체적 복구 과정은, 이를테면 3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5조 달러는 족히 될 것이다. 비록 어떤 전문가들은 1조 달러보다 더 적게 예측하기도 하지만 말이다.<sup>18)</sup> 통일이 지연되면 될수록, 그리하여 북한이 하락세에 있는 경제적 악순환을 계속하면 할수록 통일비용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의 공장들, 농장들, 그리고 경제 기반 시설들은 매일 악화되고 있다. 재건되는 것은 거의 없다. 최종적으로 통일에 도달했을 때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초기 비용은 전체 비용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북한의 광산과 공업 기반 시설이 회복된다면 통일 비용의 상당 부분은 그러한 분야들로부터의 수입 증가를 통해 보상될 수 있다. 북한의 광물 자원과 수력 발전을 개발하는 것에 더하여, 통일한국은 대륙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국제 시장 사이의 통상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한국은 재정적으로 개선되어질 것이나, 단기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며 새로운 한국 경제가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을 것이다.

### 3. 한국 통일에 관한 미국의 관심과 입장

냉동식품으로 유명한 사라 리 코포레이션(The Sara Lee Corporation)은 여러 해 동안 광고 슬로건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사용했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사라 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한국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태도도 이와 같다. 즉, 통일이 미국의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든 아니든 통일은 지지되어야 한다 (통일이 미국의 국익과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19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 이승만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 한국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sup>19)</sup> 재직 시 한국 정부의 열렬한 팬은 아니었던 카터 대통령은

18) 2010년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통일비용으로 5조원을 예측한 바 있다. “Hyun In-taek: It Would Be Hard for Two Koreas to Coexist if Peace Not Achieved,” *Interfax* interview (September 17, 2010), <<http://www.interfax.com/interview.asp?id=189751> Hyun.doc>.

19) 이는 다음의 논문에서 인용된 발언이다: Peter M. Lewis,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이러한 미국의 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백악관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정기적으로 간행하는데, 최신판은 2010년 5월에 간행되었다.<sup>22)</sup> 발표순으로, 목록에 있는 관심은 안보(예를 들면, 자국 방위, 테러 방지, 핵확산 방지), 경제 번영, 미국적 가치의 장려(예를 들면, 민주주의와 인권), 안정적 국제질서 등을 유지하는 것(예를 들면, 강력한 동맹 유지, 국제기구의 강화) 이다.

때때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가안보 관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마지막 정부 보고서는, 1998년에 발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실려 있다. 아시아에서 군대를 주둔시킴으로 미국의 지역 관여를 유지하고, 일본·한국·호주·태국·필리핀과의 동맹 강화, 중국을 포용, 동남아시아와 러시아와의 협력 증대, 다국적 대화지지, 민주주의 증진, 반확산, 테러, 마약 거래, 초국가 범죄들과의 전쟁 등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불안정의 원천들을 약화시키려는” 목표를 특히 언급하고 있다.<sup>23)</sup>

미국 정부는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 안보 보고서를 간행할 기회를 찾지 못했으나, 씽크탱크 다섯 곳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도움을 주고자 2009년 이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의 관심사의 목록은 사실상 1998년 보고서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사소한 조정이 있었는데, 이는 중국 포용정책이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대중국 정책의 수립’으로 대체되고, 급진적 이슬람의 부상 방지, 미국의 경제력과 같은 연성권력 강화와 개방·자유 무역의 증진이 추가되었다.<sup>24)</sup>

그렇다면, 통일한국이 오늘 출현한다면, 이러한 미국의 이익들이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국가이익은 확고한 정책 지침은 아닌데 이는 맞교환(trade-offs)이란 정치세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관심사를 추구하는 데 있어 한나라는 또 다른 것은 등한시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국내 경제를 강화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자유 무역의 목표에 어긋나는 것이다. 혹은 테러리스트와 싸우기 위해 해외 독재정권의 편들기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래

22)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23) Th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issued by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of Defence, under the signature of the Secretary of Defence (November 1998).

24) Ralph A. Cossa, et al.,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Region: Security Strategy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Sponsored by IDA, Pacific Forum CSIS, INSS, CNA, and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February 2009).

서 단순히 미국의 관심사 목록을 보고서 미국이 한국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의 국익은 무엇보다도 위협, 특히 안보(군사)위협에 맞추어져 있다. 북한은 미국의 안보 위협 안전에서 상위의 순위에 있는데 아마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것이다. 일단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되거나 혹은 평화적 통일 과정에 동의하고 나면, 한국은 새로운 지역적 안보 위기에 연루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중요한 안보 이슈가 아닐 것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 관심거리는 아마도 중국으로 옮겨 갈 것이다(이미 중국이 더 큰 안보 위협이란 논란도 있다). 그래서 중국과 통일한국의 관계는 미국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통일은 미국으로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한 안보 문제 하나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은 남북한이 분단된 채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는데, 미국은 남한에 계속해서 군대를 주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북한 정부의 공식적 견해이다. 북한 사람들은 통일의 이유이며 주요한 장애물이 미국이라고 학습하여 왔다. 즉 미국은 1945년 일본의 항복 후(구소련의 역할은 언급도 없이) 한반도를 분할했으며, 김일성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동안 무력으로 한반도를 재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때부터 남한 괴뢰 정부를 통하여 한반도의 남쪽 절반을 통치했다고 비난했다. 통일 후 이러한 사람들은 한국 정책 입안에 중요한 발언권을 가질 것이다.

한편으로 한반도는 미국과 구 소련의 합의에 의해 분단되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 두 나라의 필요에 의해 직무 대행을 하고 있었으며 분단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냉전 종식 이래로, 남북한의 분단이 지속된 것은 북한 정권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는데, 북한 정권은 분단국가가 아니라면 자신의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점점 많은 수의 남한 국민들 또한 통일 비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한반도 분단의 현 상황에 대해 만족해왔다.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통일에 동의한다면, 미국의 생각과 상관없이 북한은 남한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가 실제로 미국에게 어느 정도의 이점이 있다 해도 북한의 핵위협과 끔찍한 인권기록을 생각해 보면 미국은 북한이 현 상태로 남기를 원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그 성격을 바꾸고 비핵·개방·민주 사회가 된다면, 북한이 장기적으로 남한과 분리되어 있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이라는 체제

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일을 열망함에 반하여, 통일 그 자체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sup>25)</sup> 한국은 지구 반대쪽에 있고 한국의 국내 문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거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위에서 언급된 안보적 이익들은 또한, 일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무기가 안전하게 확보되면, 한국에서 미국의 우선 관심사는 한·미 안보동맹 유지와 신속대응 및 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 군대를 한국에 계속 주둔시키는 것일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유지될 수 있지만 유엔 사령부는 목표가 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은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10만 미군이 일본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것이며, 이 논의는 일본인들에게는 달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다지 호소력이 없을 것이다.

#### 4. 한국 통일에서 미국의 역할

국익을 추구하는 미국이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02년 보고서에서 논의되었듯, 통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부분적으로 달려있다.<sup>26)</sup> 예를 들어 북한 정권이 적어도 그 권력의 일부를 포기하는데 동의한다는 계획된 통일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남북한 사이에서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 내는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로서 활동을 자처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그러한 제안을 환영하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 북한 사람들은 통일은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없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항상 주장해 왔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미국이 그러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많은 남한 사람들도 아마 동의할 것이다. 남한 사람들의 민족주의는 항상 강했으며, 그들의 남쪽 형제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적인 2천 5백만 북한 사람들이 더해지면, 한국인들은 그들의 통일에서 외세의 개입이나 외국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거의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의 역할은 미국이 통일한국을 도와 차관(예를 들

25) 이는 Peter M. Lewis,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26) 이는 CSIS의 2002년 보고서에서 제시된 합리적인 주장이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CSIS Working Group Report (August 2002).

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얻게 해주는 것과 나아가 원조의 직접제공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한국이 군사적 위협에 대해 미국이 확장역지를 계속해서 제공하기를 원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많은 부분 한-중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향후 지역 상황에 달려 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이 통일한국에 가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혹은 군사적 압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또한 한국이 중립적인 세력이 되려는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초기에 확보하고 남한의 평화 유지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의 원조도 또한 주어질 수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한반도의 북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국경을 굳게 지키거나 한반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붕괴 상황이 안정된 후에, 미국은 계획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에서와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전쟁 혹은 충돌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북한군과 싸우고 북한을 점령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후에는 붕괴 시나리오와 계획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에서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을 잡고 안정화시키는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 특히 중국의 힘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 일본 그리고 아마도 한국의 관심사일 것이다. 미국은 일본인들이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세력판도에서 두려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항로를 계속 열어두고 싶어할 것이다. 요약해서, 미국은 통일한국이 또 다른 일본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이 해야 할 부담스러운 역할들이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덜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남한 정부는 발생 가능한 통일대안들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신속하게 개입하느냐를 고려하는 이상의 통일 준비를 했다는 보이지 않는다.<sup>27)</sup>

위에 언급한 CSIS 보고서는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정책의 정책추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의 관심과 부합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27) Edward A. Olson은 2005년 논문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U.S. Planning towards Korean Unification: A New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pp. 97~112 참조.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가치와 범위에 대해 한국과 논의하고 그 조건을 조정할 계획을 세워 안정화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미군이 통일한국에 남을 수 있게 할 것.
- 한국의 안보위협에 대해 미국이 확장억지를 계속하겠다는 안보공약을 제공할 것. 그리하여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지역무기경쟁에 참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할 것.
- 통일로 가는 어려운 전환기 속에서도 실제적 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것.
- 통일국가의 북쪽 절반에 재건 노력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
- 북한 정부에 의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숨겨진 대량살상무기를 초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통일한국이 새로운 지역 질서에서 평화롭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도록 지역에서 다자간 대화를 장려할 것.
- 현재, 그리고 미래에 두 나라 사이의 원만한 실무 관계를 위해 공공 이해와 지원을 한국과 미국에서 장려할 것.
- 통일 과정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적어도 경제적 역할을 할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화해를 도모할 것.

이 글의 서두에서 했던 주의사항들은 다시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추천들은 불가피한 한국 통일을 준비하는데 신중하고 심지어 필요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사람들이나 정부들이 마감시간이 없고 다루기 힘든 작업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통일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문제가 아니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글로벌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부딪히는 도전이다. 그러나 미국인들로서는, 세상에 그들의 참여가 너무 광범위하여 그들의 관심이 많은 국제 문제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느 날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되고, 바로 그 날 미국이 한국 통일에 관여할 때의 성공여부가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가 이미 투입되어 왔는지에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Park, Young-Ho and Hyeong Ki Kim.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

### 2. 논문

Lewis, Peter M.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 Anti-Unification Policy or Just Too Many Uncertainties to Account For?"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Olson, Edward A. "US Planning towards Korean Unification: A New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 3. 기타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CSIS Working Group Report, August 2002.

Cossa, Ralph A. et al.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Region: Security Strategy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Sponsored by IDA, Pacific Forum CSIS, INSS, CNA, and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February 2009.

The White Hous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June 16,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t-vision-for-the-alliance-of-the-United-States-of-America-and-the-Republic-of-Korea](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t-vision-for-the-alliance-of-the-United-States-of-America-and-the-Republic-of-Korea) Joint Vision.doc>.

\_\_\_\_\_.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November 1998.

『로동신문』 (인터넷 판). <<http://dprkmedia.com>>.

『KBS』. <<http://www.kbs.co.kr/tv>>.

『조선중앙통신』 (영문판). <<http://www.kcna.co.jp>>.

『The Daily NK』 (영문판). <<http://www.dailynk.com>>.

『연합뉴스』 (영문판). <<http://english.yonhapnews.co.kr>>.

*Interfax*. <<http://www.interfax.com>>.

*New York Daily News*. <<http://articles.nydailynews.com>>.



# IV.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 IV.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Takashi Inoguchi(현 니가타현립대 총장, 동경대 명예교수)

### 1. 일본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전략환경

필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 둘째, 남한이 통일 업무를 떠맡으려는 준비와 결심이 되었다. 셋째,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남북한이 통일을 사실상 합의한다. 넷째, 북한의 대외 활동의 수행이 무효가 되고, 남한의 대외 활동 수행은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통일 이전 북한의 영토에까지 확대된다.

이와 같은 정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극단적 시나리오이다. 필자가 이런 정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도출될 수 없는 개연성이 희박한 효과나 결과를 많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자가 이와 같은 정의를 채택하는 것이 앞으로 전개될 필자의 설명이나 분석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전략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가별로 검토할 것이다. 즉, 미국, 중국, 러시아연방 그리고 일본의 순으로 검토할 것이다.

#### 가. 미국

첫째, 한반도 통일은 한국의 국경선을 중국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할 것이다. 아마 한국과 미국은 통일이 실현되었을 때, 한·미 양자 동맹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주한 미군은 중국군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즉, 휴전 협정 직후 중국군대가 북한에서 철수했는데, 미국군과 중국군이 재차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통일은 핵무기 보유가 가능한 두 불량국가, 즉 이란과 북한 중 하나가 제거된 것을 의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보유와 시설들이 남한에 의해 계승될 것인지, 오키나와의 후텐마 해병대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에 의해서 파괴될 것인지

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미국은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시설들을 계승하게 허용할 것인가? 통일한국은 비핵화 입장을 선언할 것인가? 미 해병대에 의해 핵무기 보유와 시설이 파괴된 후에도, 통일한국은 다소간 모호한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필자는 추측한다. 미국이 수용할 수용방식에 따라, 이를테면 인도-미국 핵 협력의 협정처럼, 한국은 핵을 보유하려 할 수도 있다.

셋째, 한반도의 통일은 활기찬 한국의 자본주의와 그에 못지않게 활력있는 중국의 자본주의가 직접 마주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종류의 자본주의의 사이에서 어떤 식의 충돌과 협력이 혼재해 나타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이 자국의 전략 환경을 인식하는데 있어 1911년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와 유사한 영향을 줄 것이다. 1911년부터 일본은 청진, 평양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를 따라 산업 기반 시설과 중공업을 건설하였으며, 더 나아가 만주와 중국 북부의 해안 지역 일부까지 식민지화하는 길을 열었다. 지금 나진-선봉지구와 황금평 특별 경제 구역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계획 중이다.

넷째, 한반도 통일은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 Watch)<sup>28)</sup> 등 비정부 기구들이 인권 감시 활동을 압록강을 지나, 중국 특히 약 200만 명 규모의 소수 한국 민족이 거주하는 연변지역까지 활발히 전개할 것을 의미이다.

현재 중국은 티벳과 칭하이 지역의 티벳인들과 신장-위구르 지역의 위구르인들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동북부 지역의 조선족 문제, 내몽고 지역의 몽고 소수 민족 같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문제를 더 가지게 된다. 중국으로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소수민족 문제를 2개나 안게 되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 나. 중국

첫째,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동요시킬 수도 있다. 터키가 터키 역내의 아르메니아 소수 민족의 문제를 직면하였듯이, 중국도 조선족 즉 한국의 소수 민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1차 세계 대전 기간과 그 이후, 신생 독립국 터키는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을 대량 학살했고,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던 다수의 공동체들을 터키에 합병시켜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터키를 떠나게 했다.

28) 역자 각주, Human Right Watch(HRW)는 뉴욕에 본부가 있는 국제 NGO이다.

둘째, 한국 자본주의는 중국에 깊이 침투할 것이며 잠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자원이 빈약한 한국과 중국 양국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자원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이미 격심한 자원 경쟁을 겪고 있다.

셋째, 중국은 발해만과 동지나해에서 에너지 자원을 절실하게 탐사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에 못지않게 해저 자원을 탐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해저 자원 탐사가 충돌할 수도 있다. 주목할 점은 동지나해에서 중국 해상 순시함이 중무장한 한국 군함과 싸운 적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의 베이징이나 다른 중요한 산업시설, 해군 등 군사시설이 핵 무장의 통일한국과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는 점에 대해 중국은 우려를 가질 것이다.

다섯째, 통일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와 개입(congagement: 전략적 봉쇄 혹은 제한 및 경제적 개입) 전략에 인도처럼 스스로를 ‘인질’로 전략 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우려할 것이다.

## 다. 러시아

첫째, 러시아는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담담하게 수용할 것이다. 즉, 과거 러시아의 위성 국가였고, 최근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한 나라를 잃게 되는 상황을 조용하게 수용할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는 통일한국에 대해 러시아가 인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즉 러시아는 한국을 자국의 자원과 무기의 고객으로 간주할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의 핵보유국 지위 계승은 러시아에게 달갑지 않다. 동시에 한·러 양국의 기술 및 과학 협력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강화될 수 있고, 중국에 대한 견제 노력에서 증진될 수 있다.

셋째, 러시아는 통일한국을 일본이나 중국처럼 러시아 천연 가스 자원의 또 다른 고객으로 환영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한국은 러시아로 하여금 울란우데, 블라디보스토크, 나진-선봉, 서울 그리고 부산까지 잇는 가스 파이프를 건설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고무시킬 것이다.

넷째, 러시아는 동해가 미국 해군에 의해 더 심도있게 관리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사세보와 요코스카에 이어, 북한의 청진과 나진은 동북아에서 미국 해군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청진과 나진은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훗카에서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 라. 일본

첫째, 통일한국이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은 일본으로선 달갑지 않다. 핵무기 보유국인 한국과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일본 사이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불균형은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핵 불균형의 관계는 건전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은 관계일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은 시장의 진화란 점에서 일본에 도전할 것이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하였고, 국내시장이 협소하였다. 따라서 남한은 국내시장의 수요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외 시장의 개척에 혁신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하였다. 아울러, 남한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 잡고 대체해 왔다.

한국이 통일을 통해 북한을 새로운 시장으로 흡수해도 이와 같은 전략을 그다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그러한 혁신적이고 공격적 전략은 점점 거세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시장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국내 수요가 약 7~8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통일인구의 규모만큼 확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의 격차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남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큰 격차와 더불어 통일한국 정부에 부담을 줄 것이다. 통일한국의 강화된 과학적 기술적 급부상은 일본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셋째, 통일 후, 통일한국 내의 소득 격차의 악화는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일부는 일본과 협력하여 미래를 구상하기보다, 과거를 반복 주장함으로써 반일 감정을 증대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훨씬 더 글로벌화가 되는데 비하여, 통일한국 내 민족주의의 급상승은 일본과 중국 등 이웃 국가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넷째,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면, 일부 일본인들은 동아시아에서 통일한국이 일본을 대체하여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평화를 사랑하고 내향적인 일본인들은 일본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의 지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일본인들은 한국이 이스라엘과 같은 전략적 깊이(strategic depth)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의 지위를 고수하고 싶어한다.

##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인식

제1절이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전략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라면, 제2절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인식에 관한 경험적·기술적 분석이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응답자들은 한국과 한·일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2010년 일본정부의 내각 관방장관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1.8%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친밀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또한, 59.9%의 응답자가 한·일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이 2010년에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야 하는가(하나를 고르라)’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즉, ▲경제(26%), ▲안보(21%), ▲환경(14%), ▲문화(12%), ▲관광(9%), ▲지방 자치체 교류(8%), ▲스포츠(5%) 등 순이다.

그리고, 요미우리신문의 같은 통계조사에서는, 북한을 처리하는데 있어 여섯 가지 주요 사항 가운데 두 가지를 고르라는 질문을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2010년 요미우리신문의 설문조사

	일본	한국
(1) 핵개발 철폐	47%	58%
(2) 미사일 개발과 실험 철폐	22%	29%
(3) 일본 민간인 납치문제 해결	61%	4%
(4)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한국 통일)	9%	23%
(5) 북한과의 경제협력	5%	32%
(6) 6자회담의 장려	35%	37%
(7) 기타 의견	0%	0%
(8) 의견 없음	1%	2%
(9) 무응답	2%	3%

일본 대중들의 수준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특별히 높지는 않다. 즉, 일본인들의 지배적인 내향적 성향을 가정해 볼 때, 한반도 통일이 일본인들에게 그리 흥미롭지 않은 것이다.

한국 통일 자체는 곰곰이 생각하기에 쉬운 주제는 아니다. 한류 스타, 한국 음악, 한국

음식, 지나치게 경쟁적인 대학 입학시험, 삼성 등, 한국과 관련된 사건에 일본인들은 때때로 주목한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핵 개발과 6자회담 등은 일부 일본인들이 관심을 갖는 정치적 사건들 가운데 주요한 3가지 사항이다.

그렇지만,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형태의 사항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은 통일문제에 대해 약간의 관심이라도 보이는 일본인들에게조차 불투명한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먼 미래에 가능한 일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혹은 그 이상, 북한 붕괴가 매우 임박했다는 것이 간헐적으로 언급되었다.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였을 때나, 혹은 기아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조차, 대규모 시위나 집단 저항, 혹은 궁중 쿠데타나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는 것에 관한 보도는 없었다. 일부 고령의 일본인들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시기에 한반도에서 대규모의 집단행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군사적 억압이 아마도 저항을 쉽지 않게 만든 것 같다.

북한은 ‘선군정치,’ ‘강성대국’ 같은 슬로건으로 국가를 계속 유지하며 연명해 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사람들은 이를 의아하게 여기는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당국의 군사적 억압, 지배 엘리트 그룹의 교활하고도 잔인한 생존전략 등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한국 등 인접 국가들의 기본적인 현상유지 지향의 정책과 함께 북한정권의 연명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한 양쪽 모두가 상당 기간 동안 평화 공존, 평화적 상호 교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다. 현재,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다. 최근의 북한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리비아 모델이다. 리비아와 서방은 2003년에 리비아의 비핵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리비아는 비핵화의 대가로 자유무역과 일종의 투자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리비아에서 반란이 발발하고, 리비아 정부군이 반란군과 시민들을 죽이기 시작했을 때, 리비아는 나토군의 군사적 개입을 받게 되었다. 즉, 나토군은 리비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리비아 정부군의 비행 구역 사용을 금지하는 군사적 개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나토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하고 카다피 정권을 축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북한은 나토의 개입을 비난하며, 서방세력이 북한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더라도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였다.

### 3. 한국 통일을 위한 일본의 역할과 한·일 전략 협력

#### 가. 일본이 우선시 하는 것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 통일의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통일을 보다 평화적으로 추구하는데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1) 비핵화 선언

북한은 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을 민도록 강력하게 강요해 왔다. 또, 북한은 굴욕을 받는 것을 몹시 싫어하였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위협에 빠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시당하는 일 없이 당당한 국가가 되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 발전소를 가동해야 한다고 전략적으로 인식했다. 그러므로 북한은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6자회담에서 초기 협상은 5자가 핵 발전소를 북한에 제공하고 그 대신 북한은 핵무기 생산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핵연료 생산과 핵무기의 개발을 추구하였고, 성공했다. 북한은 교활하고 교묘하며, 민첩한 외교로 그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을 속일 수 있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 일본의 요구는 북한의 비핵화이며, 통일한국과 일본은 ‘비핵화 공동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다.

##### (2) 자유 무역 협정의 전 영역 확대

일본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통일한국과 일본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혹은 이에 상응하는 경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때때로 거의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았는데,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거의 결론에 도달하였지만, 체결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이 ‘통일 이전에 체결되느냐, 안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일본이 원하는 것은 통일한국과 일본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양국의 경쟁력과 경기 회복력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다. 통일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1인당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큰 시장, 즉 한국과 일본의 연합에 의한 ‘인구 2억 규모’의 매우

큰 국내시장의 탄생을 시사한다.

지금 당장은 일본의 제조업 분야가 해외에 상품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직접 한국에 투자하고, 한·일 양국이 첨단 기술과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품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들인 EU와 미국 시장에 수출하면, 한국과 일본 모두 만족할 것이다. 통일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상호 혜택을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다.

### (3) 역사 문제

한국과 일본은 공식적이건 비 공식적이건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역사문제에 관한 공동성명과 선언을 발표해 왔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세 가지 사항에 서약하였다. 즉, ▲전쟁과 식민지 시기의 과거사 반성, ▲한·일 국가 차원과 국민 차원의 협력 촉진, ▲협력적이고 번성하는 미래에 대한 구상 등에 서약하였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한국과 일본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4) 납치문제의 조사 보고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한국과 일본은 납치문제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여야 한다. 즉, 통일한국과 일본은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민간인들의 납치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언해야 한다. 아울러,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통일한국과 일본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보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언해야 한다.

## 나.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1) 외교적 지지

통일한국은 일본에 의해 가장 먼저 환영 받아야만 한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했던 지진, 쓰나미와 뒤이어 벌어진 핵 재난의 시기에 모든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일본으로 가장 빨리 구조팀을 보냈듯이 일본도 한반도 통일을 가장 먼저 환영해야 한다. 일본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지원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 (2) 통일기금 조성

통일기금은 통일과 통합을 위한 수많은 사업들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조성되어야 한다. 통일 이전의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큰 격차들, 즉 인프라, 산업 기반, 기술 수준, 가계 경제, 통치 구조 등의 큰 격차를 고려하면, 통합에는 막대한 재정 자원, 전문 인적 자원, 훌륭한 정책 아이디어 등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통일이 보다 긍정적이고 유익한 효과를 확대시키는 것과 아울러, 문제점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일기금이 글로벌화된 방법으로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기의 막대한 통일비용의 조성과 관련,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의 참가국들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3) 이주 관리

한반도 통일이 어떤 형태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일 통일이 북한 정권의 붕괴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북한 지역 거주자들의 집단적 대이동이나 외부로의 이주가 예상되는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북한지역 거주자들의 이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에 참가하는 5개국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

## 다. 한국 통일을 위해 일본은 한국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가?

첫째, 중국을 상대로 하여,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인접해 있는 미국의 동맹국가라는 의미를 약화시켜야 한다. 한반도는 중국의 수도와 중국의 동북지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관계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에서 통일국가의 출현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과거에 경험했던 시나리오가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11년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는 중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했으며, 1951년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과 압록강을 향한 전진은 중국에게 직접적 위협을 주었다. 한국과 일본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에게 한국통일이 1911년이나 1951년의 상황을 재연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 중국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력에 의한 대중국 ‘봉쇄와 개입(congagement)’ 전략을

매우 경계하고 있으므로, 한·미·일 3국은 중국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을 상대로 하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가로 있는 동안, 비핵화 정책을 추구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의해 그 전략적 지위가 압록강까지 공고해지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과 시설을 계승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의 영토와 NLL 이남 지역의 해상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였을 때, 한국 내 일부는 북한에 보복하기 위해 한국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반도의 통일 후,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중국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반도 통일 후에 제주도에 미사일 발사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발상도 중국을 전략적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NPT)의 제한 내에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과 일본 중 한 나라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틀을 깬다면, 5대 핵보유국, 특히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을 미국의 공고한 동맹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며, 전체적인 전략을 대폭 수정할 것이다. 즉, ‘군사적으로 강한 핵무장국’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의 공고한 동맹국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셋째, 러시아를 상대로 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다. 러시아와 한반도에 관한 최근의 화제는 울란우데와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는 천연가스관의 설치 계획이다. 이는 중국이 동해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나선향을 인접한 길림성에 연계시키고 있다. 또, 중국은 함경북도 지방의 나진·선봉 지역과 평안남도 지방의 황금평 지역을 특별 경제구역화하는 협정을 북한과 체결하였다. 이 문제는 일단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다시 대두될 수도 있다. 소프트한 봉쇄와 개입(soft conagement) 정책이 아주 능숙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결론

본 논문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필자는 우선 한반도 통일을 ▲북한의 붕괴의 결과 ▲한국의 북한 흡수의 준비와 의지 등의 관점에서 정의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정의는 유일한 정의가 아니고, 특별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 시나리오는 우리들이 통상적 사고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고찰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다른 다소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북한이 거의 붕괴되었으나 한국이 통일한국 건설의 책임을 떠맡을 의사가 없을 경우, 통일 이전의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연방제로 나아가는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의 변형은 북한이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실패한 국가'가 되지만, 주권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도와주는데, 북한 지역은 한국과 중국에 의해 반(半) 식민지화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본은 적절한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다.





# V. **공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향한 경로 관리** : 중국적 방법



## V.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향한 경로 관리 : 중국적 방법

You Ji(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사회과학 및 국제학대학 부교수)

본 논문의 중심 논제는 한반도 내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한 해에 걸친 압력과 설득의 강인한 노력과 한국과 미국의 점진적이고 선도적인 북한과의 대화 재개로 인하여, 2010년 북한의 모험주의의 결과로서 촉발된 최악의 남북 무력대치는 최근 수개월간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sup>29)</sup> 이것은 중국에 큰 안도가 되어 2011년에 남북한 문제의 즉각적 위기관리와 관련한 중국의 정책적 초점이 한반도 내 장기적 안정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일부 옮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 내의 안보적 도전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 인식은 여전히 매우 무겁다. 김정일 권력승계의 예측 불가능한 과장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화된 군사적 압력을 고려할 때, 협상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찾기 위한 일종의 벼랑끝 전술이 분쟁의 양 당사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시도될 수 있다. 중국은 2010년과 같이 십자포화에 갇힐 지속적 위협이 있다. 더 중요하게는 2010년도의 한반도 위기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전략적으로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이로써 중국은 김정일의 급사, 김정은 권력이 양의 실패, 북한 내부 위기의 악화, 북한을 지속적인 동요 속으로 빠뜨리려는 미국과 한국의 강화된 공세, 그리고 지역 안보 환경 내 상승하는 긴장 (예컨대 미·중 양국 간 변동하는 힘의 균형으로 인한 미국-중국 경쟁)과 한반도 갈등 간의 밀접한 관계 등의 요인을 고려한다.

중국이 '위기 회피'에 기반한 한반도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상기 요인으로 인해 현상유지(status quo)는 점점 더 유지되기 힘들어진다는 점 또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적 쇠퇴는 정치적 타락을 초래하였다. 공존을 위한 '북한의 주적'들의 인내는 점차 소진되었으며 그들은 흡수 통일 과정을 신속화하기 위한 기회를 얻으려 해 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의 연합적 측면을 강조해왔는데, 이는 후자로 하여

29) 이것은, 예를 들어 2011년 11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의료 지원과 2011년 10월 독일에서의 북-미 접촉 재개 등에 공고히 반영되었다. *Channel News Asia* (November 8, 2011).

금 그 대응으로서 군비 증강을 가속화하도록 압박할 것이다.<sup>30)</sup> 예상치 못하게, 중국은 아시아에 소규모 반 중국 NATO를 설립하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구상에 반하여 북한 카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0년 유쾌하지 않은 일련의 국제적 사건들은 중국을 외교적 곤경의 시기로 밀어 넣은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 내의 긴장이 현명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은 지역 내 그 힘의 지위에 대한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중국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중립’의 입장을 지닌 ‘동북아의 기인(odd man)’과 같이 보였다.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는 더 좋은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sup>31)</sup>

## 1. 동북아시아 내 악화되는 안보 환경

비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이론적으로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접근법을 선호한다.<sup>32)</sup> 그러나 북한 정권의 생존을 돕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북한에 대한 한·미의 적대적 의도와 직접 대결하는 구도로 중국을 자리매김 시킬 수 있다.<sup>33)</sup> 한·미의 북한의 도전에 대한 지속적 반대는 양극적 진영구축과 유사하게 역내 전략적 재편성이 태동하는 것을 촉진하였다: 중국에 대한 집단적 포위를 조성하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역 포위가 그것이다.<sup>34)</sup> 확실히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선택이라기보다는, 2010년 한반도 상 대결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양극적 재편성이 강요된 것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재편성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작용-반작용 주기

30) 다이 쉬(Dai Xu) 대령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C형 아치 구축에 대한 영향력 있는 견해를 재기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그의 책, *C-shape arch against China* (Shanghai: Wenhui Chubanshe, 2010) 참조.

31) You Ji, "Dealing with the 'North Korea Dilemma': China's Strategic Choices," *RSIS Working Paper*, No. 229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2011).

32) Gong Keyu,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ese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1 (2009), p. 114. 참조

33) 2011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상그리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미국 국무부 차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는 본질적으로 한·미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표명한 바 있다.

34)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의 신간, *On China* (New York: Penguin Press, 2011) 참조. 전 지구적 다극체제의 태동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의 질문에 하버드 대학의 스테판 월트(Stephen Walt) 교수는 전 지구적 다극체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부상하는 미·중 양극체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응답하였다. 2011년 1월 14일 난양이공대학 RSIS에서 행한 그의 강의 'America and Asian Alliance' 참조.

의 상승 작용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중국을 아시아 내 변화하는 안보 질서의 제1의 동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의 반복된 전쟁 훈련 수행과 아시아 내에 전진 배치된 전력의 강화를 통한 자국의 경성 국력(hard power) 과시 등, 미국이 2010년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슬로건 아래 보여준 명백한 적극성은 지역 내 질서 형성을 위해서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사실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안보 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 미국이 중국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것은 중국을 억제할 목적으로 지전략적 연계를 추구하는 연합을 구축하는데 공고히 구체화되었다.<sup>35)</sup> 미국은 2010년 일련의 아시아 내 안보 사건들을 영리하게 이용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한 향후 공조의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하였다. 지역적 불안정의 근원으로서 북한과 북한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중국은 이러한 양극적 재편성을 추동하고 있다.

양극적 재편성을 개념화 하자면, 그것은 두 가지 조건을 토대로 구축되었다. 첫 번째는, 수용적인(accommodating) 안보형성 과정을 통해 쉽게 연결될 수 없는 상호 불신과, 이념적 그리고 전략적 차이에 뿌리를 둔 경쟁적인 두 강대국의 존재이다. 한반도 분쟁에의 미국의 개입과, 한반도의 현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국내적 안정이라는 ‘핵심 국가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노력은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필연적이고 지속적으로 충돌하게 될 것임을 함의한다. 비록 이해관계의 충돌은 관리할 수 있으나, 권력 이동이 수반됨으로 인해 패권국이 ‘규칙’을 설정하는 데 있어 관리의 비용이 더욱 비싸질 것이다. 두 번째로, 양극체제 형성은 세력전이의 결과로서 발생할 서열의 재균형과 배치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것이 세계적인 영역에서 먼 미래에 등장할 양극적 질서이며, 현재 대부분의 징후상 여전히 가시적이지 않고, 등장한다면 초기에는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할 양극체제는 역사적으로 타 양극체제와 비교하였을 때 비정형적일 것이다. 그러한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아시아의 양극체제는 오직 양극적 재편성의 장기적 진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세계적 단극체제 안에서 일어나며 그러므로 지역 정세에 대한 미국의 지배 아래 특이한 특징을 내포한다. 그리고 양극체제는 안보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발생한다. 둘째, 양극적 재편성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 시작되는 힘의 균형의 점진적인 변화이다. 사실 아시아에서는 이제껏 어떠한 힘의 균형도 없었다. 그러나

35) *Global Times* (October 29, 2011).

미국의 수권은 중국의 부상에 의해 약화되고 있으며, 때문에 재균형 과정이 설정된다. 이 과정에서 두 강대국은 재편성의 형식으로 지역 내 지지를 이끌어낸다.<sup>36)</sup> 셋째, 아시아적 상호의존 경향 때문에, 연합 구축의 과정은 반드시 명확히 대치하는 두 진영의 발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양극적 재편성의 신호는 있겠으나, 재편성이 냉전의 유형으로 이해되는 상반적인 양극적 지역질서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양극 질서와 양극적 재편성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양 핵심 세력 간 관계가 전면적으로 대립적인 것을 가리키지만, 후자는 일련의 특정 문제에 한해 관계가 대립적이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관여된 복합적 상호의존 관계 때문에, 현행 패권국은 주요 경쟁국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동맹국으로부터 기대만큼의 지지를 요청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패권국의 주요 경쟁국은 패권국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분할지배적 대응을 추구할 것이다. 경쟁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의 경제 및 안보적 관심사의 선택적 문제에 관해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배적 국가의 동맹국들은 부상하는 강대국과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실용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상하는 강대국에 편승할 것이다.<sup>37)</sup> 그러나 ‘양극’이라는 용어를 지탱하는 것은, 그것이 질서이든 아니면 단순한 재편성이든, 핵심적 지역 행위자들이 조약적 의무, 역사적 유산, 이념적 선호, 영토 분쟁과 같은 현실적 외부 위협, 그리고 국내 정치적 필요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들의 양분된 이익과 공유된 안보적 이해관계는 그들을 일종의 ‘진영에 줄세우기’ 상황에 처하게 하며, 특히 지배적인 강대국이 ‘우리 편이 되거나 다른 쪽이 되는 것’을 주장할 때나, 부상하는 강대국이 현존 질서에 대해 조급하게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할 때 그러하다. 이는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어떤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면서 선택의 여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 현실주의 시각은 이를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것이다.<sup>38)</sup>

이러한 전략적 재편성과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안보 구조 건설의 연계는 탄탄하며 양자 모두는 미국 주도 동맹 연결망에 내포되도록 고안된 것이다. 미국이 홀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더욱 부담스러워진다고 파악하고,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지역 국가와 함께 억제” 하자는 나이(Nye)의 주장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새로운 공식이 되었다. 나이의 주장은

36) Elizabeth Economy, “Reality in US-China Relations,” *CFR Expert Brief* (January 14, 2011).

37) David Kang,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2003), p. 70.

38)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Fall 2005), pp. 7~45.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험분산전략(hedging)’을 쓰기 위한 집합적 기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전략적 지침의 역할을 한다.<sup>39)</sup> 중국의 분석가에게 미국의 아시아 복귀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을 이용하는 나이(Nye)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지역 분쟁 내 편들기와 연결된다.

일차적으로 연합 구축은 특정 문제에 대한 협력의 형식을 취할 것이다. 이는 2010년 북한의 모험주의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 동맹의 압력에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증폭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입된 행위자의 즉각적인 작용-반작용적 난투보다 훨씬 뿌리 깊은 심각한 결과를 수반하며 불필요하게 미·중 관계를 악화시켰다. 중국에게 이것은 단순히 미국과 동맹/우호국들이 중국의 행위의 자유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고립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는 새로운 위협 인식을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sup>40)</sup> 중국의 불안은 전략적으로 미국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침식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sup>41)</sup> 대만의 법률상 독립을 장려하는 것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나, 연합 구축은 훨씬 비용대비 효과가 크다.<sup>42)</sup>

그것은 미국 주도의 양자적 동맹을 다자 동맹으로 확대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몇몇 시점에서 추구되었으나 느린 추세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간의 삼자 안보대화는 연례 2+2 각료급 회담에서 정보 공유, 군사 시설의 배치, 고위 장교의 정기 교환 그리고 더욱 빈번해진 합동 전쟁 연습 등을 포괄하는 더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삼국 국방 협력으로 차분히 승격되었다.<sup>43)</sup> 2010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의 3자 회의는 천안함 사태 이후 삼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평도 포격은 세 국가들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새로운 틀을 설정하는

39) Joseph Nye,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Dominance and Decline in Perspective,” *Foreign Affairs*, Vol. 89, No. 6 (2010), pp. 2~13.

40) “America Encircles China from Two Fronts through Manufacturing Hostility toward China over the SCS Dispute,” *Global Times* (July 27, 2010).

41)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의 2005년 3월 동아시아 방문 시 언급내용 참조. *Associate Press* (March 21, 2005).

42) Emma Chanlett-Avery and Bruce Vaughn, “Emerging Trends in the Security Architecture in Asia: Bilateral and Multilateral Ties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and India,” *CRS Report for Congress*, RL34312 (January 7, 2008).

43)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실재는 더 많은 군사 시설의 배치, 합동 연습 및 공식 요원 교환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북호주 다윈의 영구 미군 기지는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The Australian* (November 11, 2011).



데 있어 새로운 촉매가 되었다. 이것은 3국간 정기적 안보대화과 합동 전쟁 훈련을 포함한다.<sup>44)</sup> 워싱턴 회의는 단순히 분리된 두 개의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작은 조치였으나 미국에 의해 추구되고 주장되어왔던 군사적 협력의 다소 초기적인 형태이기도 했다.<sup>45)</sup> 미국의 독려로 한국과 일본은 2011년 11월 11일~12일간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집단적 방위 조처의 알려진 목표는 중국이 아닌 북한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은 다만 현재의 다급한 고려에 기인한 것이지만, 북한은 중국에 대항한 궁극적 합동 방위 관계의 걸쭉데기로 사용된다고 인식한다.<sup>46)</sup>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3자간 안보 블록이 형성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일본은 헌법적 제한 때문에 3자 안보 블록의 구축에 군사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일본 식민지주의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sup>47)</sup> 그러나 만약 한반도 내의 긴장이 심화되거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다면, 발현하고 있는 삼국주의는 더 구조화될 것이다.<sup>48)</sup>

## 2. 전조를 보이는 한반도 위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국은 한반도 내 안보의 안정에 대한 다소 비관적인 평가를 가진다. 한반도의 현 상황은 중국의 사회적 안정이라는 국내적인 우선순위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sup>49)</sup> 중국은 현 상황을 유지하기 더욱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화의

44)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무부 관료가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정책조율의 관점에서 한·미·일 관계를 새로운 정의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6, 2010).

45) 미 태평양사령부는 확대된 군사 협력의 방안으로서 3국 해상 훈련에 한국과 일본을 합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46) "US-ROK War Games Challenge Chinese Psychological Bottom Line," *China Review* (December 1, 2010).

47) 센고쿠 요시토(Yoshito Sengoku)는 한·미 해상 훈련에 합류하는 것에 관해 주의를 피력하였으며 한국 국방 관료들은 위기 시 일본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한국에 일본 항공자위대를 파견하려는 간나오토(Naoto Kan)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미국이 3국간에 더욱 공식적인 방위 관계를 추진하였을 때 일어났다. 『조선일보』, 2010년 12월 13일.

48)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은 2011년 1월 10일 서울에서 더욱 진전된 전투 군수 지원과 정보 공개를 허하는 양자 군사협력 협정의 조인을 논의하였다. 이는 전례가 없던 것이었다. 『조선일보』, 2011년 1월 11일.

49) Liu Jixian, "New Development of PLA Political Work: Study Hu Jintao's Military Thought," *Zhongguojundui zhengzhigongzuo*, No. 10 (2008), p. 2.

축매는 38선의 양측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북한은 오랫동안 준 위기상황 속에 있어 왔다. 오늘날 김정일의 사망은, 만약 그것이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격변을 유발할 것이다. 북한에서의 권력승계는 김정일의 분리지배 통치방식에 기인한 치열한 엘리트 권력 투쟁을 유발할 것이다. 북한 독재 정권에서 권력 이양의 각 주기는 본질적으로 영합적인(zero-sum) 권력 재분배 과정을 수반한다. 대내외적 위기로 인해 이미 상당히 약화된 북한의 정치체제가 이러한 엄청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까?<sup>50)</sup>

한국의 경우, 한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 선택은 후자의 정책적 정향이 강경일지 혹은 온건적일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견 ‘햇볕정책’의 종료는 부분적으로 2010년 김정일의 모험주의가 한 원인이었다. 때때로 외부적 요소는 북한의 외교정책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으로 공세적이다. 지속적인 군사 훈련을 위시하여 다수의 한국-미국의 압력에 기반을 둔 조치들은 북한을 도발적인 분위기에 빠뜨리고 전략적 실수를 범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이 만약 정권 교체 목적에서 북한을 코너로 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겠으나, 심지어 김정일의 자살 공격과 같은 향후 무력적 대결의 위험부담은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장기적 안보 전망은 어둡다.

다른 한편으로, 2010년 대결의 한 장이 넘어가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중국의 일반적 평가는 짧은 기간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덜 비관적인 것이 되었다. 이것은 다음의 기본적 계산을 기반으로 한다.

### 가. ‘안정’에 적합한 요소들

첫째, 중국이 목도한 격변의 한 주요 원인은 김정일의 권력승계 실패와 그 결과로서 생긴, 그리고 남쪽으로 퍼질 수 있는 북한 내부의 내전이다. 논리적으로 이 때문에 중국은 김정일을 지지하여 북한 정권의 생존을 돕는다. 다른 한편으로, 부자 세습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지지를 제외하고는 중국은 스스로 북한의 권력승계 계획에 특별한 영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은 상속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평양의 냉혹한 현실 정치를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은 확신한다.<sup>51)</sup> 만약 역사가 김정일에게 그 아들을 교육시킬 5년을 허

50) You Ji, “Hedging Crisis and Opportunities of North Korea’s Hereditary Succession: a Chines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1) 참조.

51) 2001년 김정일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잘 회복하였다. 이후에 그는 이 문제를 계획하였다.

락한다면, 김정은이 상속 과정 중 발생할 많은 난점에도 상속을 공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유교적인 주체사상은 계승자에게 자동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일 반대중은 무지 속에 새 지도자를 수용할 것이다. 권력 이양과 공고화 기간 동안 젊은 지도자가 풍파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더 영리하고 현명한 일일 것이다.

둘째, 2010년 북한의 모험주의는 주로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노선에 대한 축적된 좌절의 표출이었지, 남측에 대한 방어-보복적 입장의 기본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극단적 약체의 입장에서 북한은 일정기간 대결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다. 북한의 공세는 손자의 '방어 목적을 위해 공세적 수를 취하는' 책략을 반영한다.<sup>52)</sup> 이러한 상황 하에서, 김씨 일가는 벼랑끝 전술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언제나 궁지에 몰리기 전 후퇴한다. 그러므로 남한에 의해 심각하게 도발당하지 않는 한, 북한이 2010년의 도발을 가까운 미래에 반복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모두의 최고 이익인 한반도 내의 안정 회복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2010년 한반도 내 실제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분쟁에 연루된 당사자 중 어느 쪽도 대결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에 동북아에서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중국의 궁극적인 자신감에서 기인한다. 전략적인 기회의 시기를 잡는다는 중국의 비전과 들어맞는다. 비록 기술적인 모험주의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북한의 최고 우선순위는 여전히 정권의 생존이지, 남한과의 전쟁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주요 공세에 대해 잘 대비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의 불황과 이란으로부터의 더 화급한 핵 도전이 "적대적 의도"를 정권 교체 전쟁으로 변환하려는 미국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은 때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뿐만 아니라 그 동맹들 또한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굉장히 꺼린다. 따라서 양측으로부터의 도발은 긴장의 수준을 올릴 수 있겠으나 실제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 내 모든 당사자는 한반도내 즉각적인 변화가 가져올 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현상유지에 지속적으로 천착한다. 이것은 비록 북한 내부에 주요한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그것이 결국 통일로 이어질 수 있겠으나, 즉각적인 변화는 현재 너무 대가가 큰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묘한 균형이 타격을 입으면서, 모든 국가가 '위협분산전략'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나 아직

.....  
 다음 인원으로부터의 정보: Lu Guangye, former PLA attach to Pyongyang, in Sydney in July 14, 2003.

52) Zhang Zujian과 Zhang Zhaozhong 간의 대담, *Associated Korean Press* (December 28, 2010).

실제로 행동을 취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

## 나. 오판의 가능성

단기적으로 중국은 동북아의 안정 유지를 위한 열쇠는 어떻게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본다. 2010년 김정일에게 용기를 준 것은 주변국 중 어느 누구도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그의 도박이었다. 김정일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씨 일가는 상기한 전략적 계산 하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남한에 도전할 수 있다.<sup>53)</sup> 이것은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명확히 김정일이 모험주의를 계획했을 때 그는 중국의 간섭에 강력히 저항했다. 그러나 국제 식량 원조 전체의 70%와 북한 에너지 수요의 80%에 달하는,<sup>54)</sup>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 원조를 고려할 때, 그 영향력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것이다.<sup>55)</sup> 그러나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경제적 원조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북한의 생존과 연결되어있기에 돌이킬 수 없는 무기이다. 만약 중국이 원조를 보류하고 북한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한다면, 북한의 주적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원조를 끊음으로써 북한을 별주는 것은 중국이 마침내 김씨 일가를 내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재 중국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은 그 ‘징벌적 권한’을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아껴두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내 안보적 안정을 해치고 비핵화를 위한 분위기성에 위해를 가한 북한의 전술적 군사 도발을 비판하였다.<sup>56)</sup> 후진타오(Hu Jintao) 주석은 김정일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참을 만큼 참았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였다. 후 주석은 김정일에게 한·미로부터의 어떤 압력이 가해지던지 간에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만약 북한이 대결에 대해 상대방에 책임소재를 전가한다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기

53) Zhang Liangui, *Phoenix TV* (2011); “North Korea may have Further Provocations for Power Succession,” 『연합뉴스』, 2011년 2월 10일.

54) Ether Pan,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rief Paper* (July 11, 2006).

55) Y. W. Kihl and H. N. Kim, *North Korea: the Politics of Survival* (New York: M. E. Sharpe, 2006), p. 197.

56) Qu Xing (ed.), *The Blue Book: World Situation an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2010*, (Shishichubanshe, 2011), pp. 83~96.

대하지 말아야 한다.<sup>57)</sup> 2010년 12월 이후 한국에 대한 북한의 누그러진 반응은 이러한 언명이 효과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다. 김정일은 중국인들에게 그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가혹한 대응’을 반복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안심시켰다.<sup>58)</sup>

단기적으로는 전쟁의 실제적 위험은 남한이 북한의 도발에, 심지어 기술적인 형식으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의 국내정치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을 때 대통령이 온건하게 행동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감각적인 반응과 과도한 반응 사이의 경계는 위험할 정도로 얇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향후 대결의 위험이 한편으로는 전쟁을 회피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강화된 압력을 가하는 한·미의 혼란스러운 신호에 기인하기도 한다고 본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거의 실제 전쟁 행위에 가까운 도발행위를 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된다. 중국의 가장 큰 걱정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북한을 두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사적 방안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해졌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사 훈련의 빈도수 증가에 반영된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의 자극적 행동은 더욱 빈번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바람직한 전술에 대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된다.

중국은 2010년의 위기가 미래에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예컨대 불필요한 미·중 긴장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국의 북한 정책을 재구성하였다.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한반도의 단기 위기관리에 집중된 중국의 대북 정책의 정향을 강제적으로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을 공식화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9)</sup> 중국은 북한의 도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새로운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북한을 정상적 이웃국가로 묘사하였다. 미래에 중국이 해야 할 일은 ‘역사적 관계’보다는, 그 개념을 북한의 이익과 도전에 적합한 확고한 정책으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북한 정책은 더욱더 유동적이다.<sup>60)</sup>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중국이 준비되기 전에 북한이 조기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한국-미국의 압력에 대응한 ‘중립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사실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비

57) 한국 전쟁에 대한 중국의 또 다른 입장에 관해서는 리우 밉(Liu Ming)의 논평 참조.

58) 2011년 10월 베이징과 서울에서 이루어진 중국 및 한국 안보 전문가와의 인터뷰.

59) 진찬롱(Jin Canrong) 교수의 Grand Academic Forum에서의 발언. *Phoenix TV* (December 13, 2010).

60) 양원창(Yang Wenchang) 대사는 중국-북한 관계를 정상적 이웃국가 간의 관계로 특징지었으며, 이는 중국 관료 집단의 첫 공개적 표명이었다. 『조선일보』, 2007년 6월 8일.

경제적이라는 점을 발견하기까지, 북한의 생명은 중국의 지지로 인하여 더욱 연장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지가 너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게 될 것이다.

### 3. 한반도 통일과 중국 요인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오랜 입장은 ‘지지’였는데, 이는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수사적 의지와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인 지지는 북한이 지역적 불안정의 주요인이라는 중국의 기본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 교체에 관한 한국의 성급한 접근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전쟁의 두 원인이 되는 남한과 북한을 제거할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지지를 얻을 만하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그 지지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 중 다음 세 가지가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재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이고, 주한미군이 부재할 것, 그리고 일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이 그 세 가지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통일 완성의 수단이 평화적이어야 하며 통일의 궁극적 과정이 외부간섭을 최소화 한 한국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의 심각한 결과가 피난민의 대량 유입과 같이 중국의 필수 이익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외부 개입이 있다면, 대만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군이 압록강을 따라 배치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중국을 집합적 안보 위협 아래에 둘 통일한국, 미국, 일본 간의 강화된 3자 동맹이 발현할 것이다.<sup>61)</sup> 오늘날 중국은 한반도 통일의 방향에 대한 스스로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된 것이라는 현실적 평가를 내린다. 따라서 중국은 불확실한 경로를 돕기보다는 차라리 그 과정의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중국이 현상 유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그 과정이 점진적이라면, 결과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대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통일한국에 대한 자신의 궁극적인 입장에 호의적인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61) 예를 들어, 셴딩리(Shen Dingli)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통일한국에 지속 주둔할 미국의 존재라는 맥락에서 대만 문제와 연결시켰다. Shen Dingli, "North Korea's Strategic Significance to China," *China Security* (Autumn 2006), pp. 19~34.

### 가. 한국과의 협력 - 중국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

남북한 간 막대한 힘의 불균형과 북한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통일은 한국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과정이 평화적이라면, 남한이 북한을 거의 흡수하는 독일 모델을 따를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이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한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의 대안은 없다. 이것은 주관적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이다. 한편, 한국은 중국의 지원 없이는 한국의 장기적 통일의 노력이 한국이 실현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중국이 북한이 어떻게 붕괴할지와 관련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sup>62)</sup>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막대한 경제력으로 인해 통일을 도울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sup>63)</sup> 사실 중국의 안보 분석가들은 서독과 비교해 한국이 경제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을 들어, 독일식 통일을 실현할 한국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안보 분석가들은 통일 지원에 있어 일본의 의지 부족과 미국의 무능력을 지적한다.<sup>64)</sup>

중국의 영향과 협력은 주로 통일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증진하는 역할로부터 반영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약 52억 달러로서, 대미 및 대일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크다. 2010년 남한의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는 50%를 상회하였다.<sup>65)</sup> 명확히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지역 정치의 재편성을 촉진하려는 장기적 전략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통일 이후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한-중 경제협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62)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필수적 이익이 고려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해왔다.

63) RAND 연구소는 한국이 북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화 7천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며, 그 정도의 자금을 한국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경제 개혁과 실패의 결과에 관해서는,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Marcus Noland, *Korea after Kim Jong I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4), p. 64 참조.

64) 남한 흡수 통일에 관한 IMEMO 보고서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발언내용은, "Focusing on Hong Kong, Macau and Taiwan," *Shenzhen TV* (November 5, 2011) 참조.

65) 이는 2010년 11월 22일 KIET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GDP(2009년 전반기)는 504조 원으로, 2008년 동기간에 비해 20조원이 증가하였다. 20조원의 내역을 분석해보면, 전체 증가분의 52%가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를 통해 성취되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성장 의존은 전반기 6개월 간 전체 수출 증가가 3.5%였으나 대중국 수출의 경우 17.2%였다는 사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10년 11월 23일.

김정일 이후 북한은 이와 같은 흡수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통일이 실현되는 방법은 남북한 간 매우 예측 불가한 상호작용과 지역 내 강대국 간 역학 관계에 달려있다. 명확히 미국과 일본은 통일한국이 중국의 영향권 내에 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을 자국의 영향권에 두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나, 미국, 일본, 통일한국 3자간 동맹이 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시소 싸움 속에 북한의 약화는 흡수를 위한 필요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나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 길이 길고 험난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비록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이후 더 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을 원용장치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에 벗어나 북한을 책무로 바라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스스로의 필수적 이익을 지킬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기 전에는 중국은 통일 과정을 장기화 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sup>66)</sup> 북한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내부적으로 촉발될 것이나 외부적인 요소가 변화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속도 설정자의 역할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전략적 관용이 필요하다.

#### 나. 통일 관련 한·중 협력을 위한 선결조건들

북한 내부 변화의 속도 설정자로서, 한국 주도 통일을 돕는 것에 대한 중국의 점진주의 전략은 이미 언급되었듯 몇 가지 선결조건을 토대로 구축되었다. 첫째, 중국-한국 협력은 “북한의 도전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적 방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국, 미국, 한국 간 오랜 묵시적 합의의 회복으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sup>67)</sup> 예를 들자면, 북한 비핵화는 오직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미국-한국 간 합의가 출현한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광복절 축사는 ‘위기관리’를 넘어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대한 종합적 대비를 포괄하는 통일모델을 지지하였다. 그는 북한 흡수를 위한 경제적 측면의 준비를 위해

66) “완충지대와 불이익”에 관한 중국의 논쟁에 관해서는 You Ji,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Vol. 4, Issue. 5 (The Jamestown Foundation, 2004) 참조.

67) 인요부분은 1998년 12월 2~6일 동경에서 열린 냉전 이후시대의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Era) 워크숍에서의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의 연설에서 인용한 것이다. 2008년 이후 미국의 기본 시각이 변경되었다.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는 이러한 새로운 서구 합의를 묘사하기 위해 중화된 용어를 사용하였다. Scott Snyder and See-Won Byu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Preparation for North Korea Inst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2 (2009), p. 11.



통일세 연구를 제안하였는데, 그 총액이 30년간 미화 2조 1천 4백억 달러에 달했다.<sup>68)</sup> 이러한 공세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대한 중국의 정의, 즉 북한은 비핵화 상태이며 미국/한국은 군사 수단을 통해 북한을 질식시키는 행위를 자제한다는 것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중국 분석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북한의 모험주의만큼이나 위험하며 중국의 통일 협력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본다.<sup>69)</sup>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통일을 위해 가장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김씨 왕조의 자연스러운 소멸이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왜 최소비용으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지 않는가? 전략적 인내는 한국이 그 최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열쇠이다.

둘째, 한국은 서해에 미국 해군을 불러옴으로써 중국의 전략 구상에 심각한 군사적·국내적 충격을 가했다.<sup>70)</sup> 일면 이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 주도 아시아 연결망 구성의 일부로 해석된다. 그 결과 중국은 양국의 필수적 이익이 충돌하는 구조적 본질에도 불구하고 북한 방어를 필요한 대응으로 본다.<sup>71)</sup> 이것은 통일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체로 중국은 북한을 제외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의 이해에 맞게 한반도 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그린다. 연착륙, 평화적인 진전, 북한에 대한 필수적인, 그러나 적절한 외부 압력, 정권 교체 전쟁의 억제, 통일 이전 비핵화에서의 의미 있는 진전과 경제적 준비가 그것이다. 많은 중국인들은 한·중 양국이 흡수 모델을 공유하고, 북한에 대한 양분된 기술적 접근을 제외하고는 전략적 이익의 충돌이 없으며, 강력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한·중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자신한다. 반면에 한국-일본의 불신은 역사적이며 영토 분쟁에 의해 강화되었다. 반미주의는 한국인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양자 간 상호작용 속에 북한이라는 가시가 완전히 사라지면, 이러한 요소들이 통일 이후 한·중 관계에 적합할 것이다.

68) "Lee Lays Out 3-Stage Master Plan for Reunification," 『조선일보』, 2010년 8월 16일.

69) "China firmly opposes U.S.-ROK naval drills in the Yellow Sea," *To Kung Pao* (July 2, 2010).

70) 마샤오티안(Ma Xiaotian) 장군은 2011년 5월 상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한-미 해상 훈련이 때와 장소를 잘못 선택한 행위였다고 언급하였다. "U.S.-ROK Naval Drills Challenged China's Psychological Bottom-line," *China Review* (September 1, 2011).

71) Zhang Liangui, "Pyongyang's Wooing Beijing is just a Tactical Adjustment," *Rennwuzhoukan (Celebrities)* (December 2010).

#### 4. 결론

한반도의 통일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다. 북한의 권력 승계가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북한 내 깊어가는 위기는 최근 몇 달 동안 통일 논의를 가열시켰다. 북한의 취약성은 모든 국민의 운명이 건강이 나쁜 한 사람의 운명에 달려있다는 하나의 사실에 있다.<sup>72)</sup> 중국은 갈등의 모든 다른 당사국과 같이, 북한의 급변에 대한 방어 전략을 만들고 있다. 북한 급변에 대한 방어 전략은 중국이 통일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관리할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 북한의 평화적인 변換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추구, 그리고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미국의 전쟁 회색에 대한 균형정책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통일 이후 역내 힘의 역학관계를 다룸에 있어 더 큰 여유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비록 중국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이웃에 대한 거대한 경제 원조라는 높은 비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통일 과정은 '위기 회피'를 원칙으로 하는 중국의 북한 정책에 중대한 충격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현상유지 기반 정책은 중국의 지속적인 '완충지대' 선호 성향뿐만 아니라, 다른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국의 어려움 또한 표상한다. 따라서 중국은 금명간 자국의 북한 정책을 가시적으로 대체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다.<sup>73)</sup> 이 때문에 위기관리를 제외하고, 중국은 더 이상 명확히 정의된 장기적 북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북한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임시적이고, 문제 지향적이며, 단기적이고, 국내정치로부터 추동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을 대결구도로 끌어들이, 특히 미국과의 대결양상으로 중국을 이끈, 2010년 북한의 모험주의로 인해 북한에 대해 다른 정책적 기본방침을 설정했을 수 있다.

통일과 관련된 거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한 방법으로 해소되기 전에는, 중국은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힘의 균형보다 협력에 기반을 둔 중국의 정책을 받아들일 통일한국의 출현을 점진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은 한국과 전략적 협조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통일로 이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

72) 9월 9일 6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영남은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에 완전히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8년 9월 13일.

73) '완충지대'와 '불이익'의 양대 학파 사이의 논쟁에 관해서는 You Ji, “Understand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Vol. 4, Issue 5 (The Jamestown Foundation, March 8, 2004) 참조.

원만한 통일로 가는 열쇠는 남북한 흡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달려있다. 다수의 중국인들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얻는데 있어 전략적 인내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1990년대 초 평화적인 정권 교체와 통일의 선례가 있다. 한국인(남북한 국민)들과 그의 친구들이 현명하고 선견지명이 있다면, 그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Haggard, Stephen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Kihl, Y. W. and H. N. Kim. *North Korea: the Politics of Survival*. New York: M. E. Sharpe, 2006.
- Kissinger, Henry. *On China*. New York: Penguin Press, 2011.
- Noland, Marcus. *Korea after Kim Jong I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4.
- Qu, Xing. (ed.). *The Blue Book: World Situation an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2010*. Shishichubanshe, 2011.
- Xu, Dai. *C-shape arch against China*. Shanghai: Wenhuchubanshe, 2010.

### 2. 논문

- Chanlett-Avery, Emma and Bruce Vaughn. “Emerging Trends in the Security Architecture in Asia: Bilateral and Multilateral Ties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and India.” *CRS Report for Congress*. January 2008.
- Friedberg, Aaron L. “The future of U.S. – 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Fall 2005.
- Gong, Keyu.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ese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1, 2009.
- Kang, David.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2003.
- Nye, Joseph.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Dominance and Decline in Perspective.” *Foreign Affairs*. Vol. 89, No. 6, 2010.
- Shen, Dingli. “North Korea’s Strategic Significance to China.” *China Security*. Autumn 2006.

- Snyder, Scott and See-Won Byu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Preparation for North Korea Inst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2, 2009.
- You, Ji.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The Jamestown Foundation). Vol. 4, Issue 5, 2004.
- \_\_\_\_\_. "Hedging Crisis and Opportunities of North Korea's Hereditary Succession: a Chines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1.
- \_\_\_\_\_. "Dealing with the 'North Korea Dilemma': China's Strategic Choices." *Working Paper, RSIS* (Na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2011.

### 3. 기타

- Economy, Elizabeth. "Reality in U.S.-China Relations." *Expert Brief*, CSIS, January 14, 2011.
- Liu, Jixian. "New Development of PLA Political Work: Study Hu Jintao's Military Thought." *Zhongguojundui Zhengzhigongzuo*, No. 10, 2008.
- Pan, Ether.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rief Paper*, July 11, 2006.

『조선일보』.

『연합뉴스』.

*China Review*.

*Global Times*.

*Phoenix TV*.

*Shenzhen TV*.

# VI. 한국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및 역할



## VI. 한국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및 역할

Alexander Panov(러시아 특명전권대사)

### 1. 한국 통일과 동북아 및 동아시아 전략 환경

통일은 오래 지속되어 온 한국 국민의 국가적 목표이다. 1972년, 1991년, 2000년, 2007년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통일의 과정과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원칙에 합의하고 재확인한 바 있다. 그것은 통일은 독립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스스로의 구상에 의해, 외세와의 동맹이나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한의 주인인 남북 국민들의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한 관계에 있어 지속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한은 공식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최소 남북 연합의 첫 단계를 창안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한 쪽이 다른 쪽의 규정과 조건에 의해 흡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남쪽을 흡수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소련의 해체에 따라, 남한은 북한의 붕괴 및 흡수에 대해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 예는 모두 ‘영합 게임(zero-sum game)’이다. 상호 존중과 상대방의 이해에 대한 인정 없이 통일 과정의 진전은 불가능한 일이다. 21세기 초에 이르러,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전망이 등장하였다. 두 번의 정상회담이 실시되었고, 양국 간 대화는 확장되었으며, 교역은 증가하였다. 한국이 자금을 조달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한 합작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일괄타결(북한 비핵화 이후 관계 정상화 및 경제 원조)’ 구상을 내놓자, 북한은 이를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기 위한 계획이 탈을 바꿔 쓴 것으로 인식하였다.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촉발된 긴장고조는 미래의 통일과 관계된 대화의 가능성 전망에 전적인 타격을 입혔다. 한반도에 대화 및 평화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제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양국 간 새로운 군사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 지와 관련해 논의되는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다. 시나리오 중 하나는 최종적으로 정권이 몰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혼란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는 한국의 흡수통일로 이어질 것이다.

흡수를 통한 급작스러운 통일은 위험할 수 있으며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의 '애국자들'과 주체사상 지지자들은 아마도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게릴라전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흡수에 저항할 것이다. 북한에 이러한 저항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한국에 장기간의 불안정과 심지어는 대대적인 내전을 가져올 것이다.

몇몇 연구는 한국의 통일에 따르는 비용이 10년간 6천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산출은 너무 낮은 것일 수 있다. 독일 통일은 20년간 1조 3천억 유로(1조 9천억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이는 동독을 재건하기 위해 서독에서 추렴된 것이었다. 독일 통일의 경험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의 통일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임은 자명하다. 남측의 경제적 잠재력은 북측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많은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현재의 삶의 수준을 유지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

독일 통일의 경우와는 달리 남북한 간은 상호연락과 여행이 불가능하며, 독일이 냉전 시기에 경험하였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전을 겪은 데에서 비롯된 개인적 불신이 양국 국민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반면에, 수차례 예언되었던 북한 정권 붕괴의 개연성은 가까운 미래에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 및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왔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임박한 붕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생존에 성공하였다. 심지어 가혹했던 아시아 경제위기(1997~1998년)도 북한의 중앙 계획경제의 토대를 침식하지 못하였다. 북한은 많은 북한 인명을 앗아간 '고난의 행군(조용한 굶주림)' 시기를 극복해냈다.

현실은 가까운 미래에도 북한 권력은 김씨 일족 및 그 측근에게 남아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들의 권력은 수천의 가족과 사회적 연결로 묶인 지배 계층의 고도로 계층화된 구조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반대 정당이나 대안권력의 기반이 없다. 모든 가능한 반체제 활동은 무자비하게 억압되며, 그것의 형성을 위한 조건 또한 부재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 정권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 정책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은 남한에 주둔한 수천의 미군이 중국 국경까지 이동하는 것을 명백히 원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

괴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는 분명한 이유이며, 이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2011년 5월 중국 방문 시 재확인된 바 있다.

중국 국영 중앙텔레비전(CCTV)에 따르면,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양 측은 안정되고 억제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융통성을 보이고, 걸림돌을 제거하며,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 안정 및 한반도 내 발전의 현실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한반도에 핵무기가 부재하고, 한반도가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기를 요구한다.”

양 정상 간 회의 후 양측은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북한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 일본, 한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1년여 만에 이뤄진 세 번째 방문이었다. 중국의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2011년 5월 28일 일본에서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경제 발전’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영 텔레비전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자동차 생산시설과 전자제품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전자책(e-book) 및 액정 디스플레이(LCD) 기술의 연구에 관해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면담하였으며, 이어진 연회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 9인 중 대부분이 동석하였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 및 개방 정책이 옳은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평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는 또한 북한이 “현재 경제 발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이 몹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방문 이후 그는 어떠한 중국식 개혁의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번 방문 시, 북한의 국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의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역동적인 진전을 목격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하였으나, 북한 내 경제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단지 “조선 인민이 그들 자신의 성공과 더불어 그들의 이웃인 중국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였다”라고 말했다.

고립과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국내 및 대외 정책에 변화를 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급자족 및 자력갱생에 기반을 둔 북한의 경제모델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비 자원을 갖고 있다. 식량 위기 시에 식량 공급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북한은 보통 몇 가지 측면에서 양보를 하지만, 자국의 핵심

적 목표에 관한 한,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변화를 기대할 단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의 점진적이고 진화적인 변화를 위한 조건들을 창조하는 것인데, 이는 중국의 초기 개혁 형태와 유사한 경제 개혁에서 시작된다.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 지도자들이 최근거리 인접국인 중국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해 큰 관심을 피력하는 것과, 왜 북한 국경 바로 밖에서는 거의 같은 기후와 농업 조건임에도 주민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구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론적으로 중국 경제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으나, 북한 지도자들은 그것이 결국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시장 메커니즘 도입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반면에, 심지어 북한 지배계층 사이에서도, 경제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점증하고 있다. 우리의 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경제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일 과정으로 향하는 첫걸음으로, 먼저 남북한 간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긴급한 수단 중 하나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초창기부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장소를 발견해내고 이를 기술적으로 분석했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관련 다자간 회담의 아이디어가 1994년 러시아로부터 최초로 제안되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남북한, 중국 및 미국)이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어디에도 러시아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1990년대 말 러시아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남북한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인들은 그들이 당면한 역사적 도전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대응을 찾아야 한다. 외세의 역할은 남북한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고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변 국가는 합리적이고 상호적인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표명해야 한다.

6자 협상과정은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오늘날 북한은 공공연하게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공언한다. 현재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전망은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토의할 채널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구' 6자 형태는 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협상 형태와 다른 의제를 고려해야 할 시기다. 원칙상의 비핵화는 가능한 것이나, 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북한 지휘부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북한에게 핵 프로그램은 먼저 세

개의 주요한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첫째, 외교관계 수립을 포함한 미국의 북한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승인이다.

둘째,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이 북한의 정치 체제를 침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외부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보장이다.

셋째, 대규모의 경제적, 기술적 원조의 제공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2011년 4월 평양 방문 시 미국이 북한에 어떤 형태로든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 없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물론 한국전쟁 이후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는 평화 조약을 원한다고 반복 천명하였다. 이제는 명문화된 정전 이후 합의들에 따라 기존의 6개국과 더불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및 UN 사무총장,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자간 외교 회의의 구상을 추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 회의를 공식적으로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의 참가자였던 UN의 후원하에 두는 것도 가능하다. 회의의 안건은 북한 핵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유지체제, 그리고 동북아 안보를 보장하는 다자간 메커니즘 창조를 위한 개념에 대한 토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한다.

러시아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정을 동결하는 문제로 2005년 6자회담이 결렬되었을 때, 회담의 재개에 기여했다.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에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2011년 봄에는 러시아 측의 노력에 힘입어, 북한이 2008년 탈퇴하였던 6자회담으로 무조건 복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러시아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제재를 위한 UN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지지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2010년 인명손실을 유발한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에 대해 깊은 우려와 비난을 표명하였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창설된 동북아 평화 및 안보 메커니즘 분과 위원회가 다자간 지역 안보 체제로 진일보한다는 의미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준칙의 원리적 내용에 합의했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회의의 의제에는 위에 언급된 북한의 세 가지 주요 관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는 지역 내 안보와 안정을 위한 결정적 요소이며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한 단계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 내 군비 경쟁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증하는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신뢰구축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조치는 협상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촉진할 수 있

다. 신뢰구축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비록 군사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조치가 군사 활동을 규제하며 군사 활동을 좀 더 예측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점 때문이다. 신뢰구축 조치는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공헌하며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그러한 조치들 가운데 가장 유용한 것들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야외기동과 군사 훈련에 관한 상호 통보
- 야외기동 및 군사 훈련에 대한 외국 군사 참관단 초청
-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서 체결
- 각각의 군사교리에 관한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토의
- 각국의 병력 배치에 관한 정보 교환

한반도 통일 이후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어떤 통일의 각본이 실행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통일 과정이 비교적 긴 시간동안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진전되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일한국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든, 필연적으로 국내적이고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주요 자원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일 것이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한편으로, 북한 경제와 사회 구조가 현대화된다면, 남한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과 천연 자원 때문에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에 대한 그러한 투자는 남측의 경제 및 사회 발전 프로그램으로부터 취해진 엄청난 금융 자원을 요할 것이다. 이는 남한 주민의 강한 불만족과 동시에 남한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투자 부족 등의 상황을 야기하기도 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통합의 과정에서 통일한국은 세계경제정세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아마도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 펀드로부터 많은 자금을 융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비단 재정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내부 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결정적 요소로서의 평화적 조건,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안정, 신뢰가 통일한국에 큰 관심사항이 되는 이유다. 이와 동시에 통일한국은 새로운 지역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어 가장 왕성한 행위자가 될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통일 과정의 시발단계는 아마도 모든 주요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의 대부분과 기구로서의 국제연합(UN) 등 거의 모두에 의해 지원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

역 내 몇몇 국가들이 강력한 통일한국의 부상을 최소한 경제 분야의 경쟁자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새로운 한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이 통일한국의 지도자들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새 국가 비전과 세계와 지역적 정체 내에서의 통일한국의 역할을 고안하고 제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이유이다.

## 2. 러시아의 국가 이익과 한국 통일에 관한 인식 및 태도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역할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의 주요 중심세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할은 한국의 통일 과정 및 그 이후에도 더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한국의 우호국으로서 러시아는 새로운 특성을 지닌 국제 사회에 통합될 것이다. 러시아는 통일한국을 잠재적인 전략 차원의 동반자로 본다. 러시아가 가장 열망하는 결과는 궁극적으로 장기에 걸친 한국 통일로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국가적 화해와 평화 공존이다. 러시아와 우호적이고 친밀하며 협조적인 관계인 통일한국의 등장은 러시아의 핵심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통일한국이 등장할지에 관한 전망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러시아 정책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매우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첫째, 남북한 양국의 화해 과정에 대한 지원이다.

둘째,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이 러시아와 여타 이웃 국가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조건하에 서 한국의 평화 통일을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 내 비핵화와, 핵 확산방지 레짐의 준수 및 지역에서 대량 살생무기를 제거하는 데 대한 지원이다.

다섯째, 러시아, 북한, 남한 3국의 광범위한 경제적 상호작용에 대한 지원과 지지이다.

중립적이고, 평화적이고, 핵무기가 없으며,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통일한국이 선호된다. 남북통일의 전망은 러시아 지도자들에 의해 제기된 적이 없으며,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조차도 논의된 바 없다. 동서독 통일의 가능성이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해당 문제에 관해 소련 지도부에 건의사항을 준비하였던 소련 학자들에 의해 분석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파괴적이고 무자비한 내전 이후 양국의 통일이라는 아이디어가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소련이 북한의 친 중국 정책 혹은 북한의 소련에 대한 상업 채무 이행에 불만을 가졌던 기간 동안에도 소련의 지도자들은 항상 평양의 김일성 정권을 지원하였다. 소련은 또한 북한 지도부에 소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반복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며, 군사-기술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모든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지하듯 소련은 서독을 승인하고 서독 정부와 전면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나 남한과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하지는 않았다. 고르바초프 시대 말에 이르러서야 소련은 남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0년에 남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민주 지도자들은 북한을 러시아와 어떤 공통가치도 갖지 않은 나라, 바람직하지 않은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정치 및 군사적 접촉은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상황 하의 러시아가 1961년 양자조약 -소비에트 연방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 우호와 협력,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에 새겨진 북한을 방어하는 의무를 이행할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북한에 통보하였다.

지리적으로 러시아는 두만강을 따라 한반도와 18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중반으로부터 거의 150년 동안 러시아는 한반도에 개입해왔다. 이제 러시아는 남한과 북한 양국 모두와 정상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 러시아는 수십 년 동안 북한 엘리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비록 현재 영향력은 제한되었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 체제와 엘리트의 긍정적 진전의 촉진을 도울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러시아의 북한과의 관계는 실용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러시아는 오직 6자회담의 진전과 UN 제재와 관련한 그 의무사항에 따라 북한에 유류와 식량 및 기타 재화를 제공한다. 러시아 자동차 생산회사 카마즈(Kamaz)는 태백산-96이라는 중형 트럭 생산에 특화된 조립 라인을 북한에 개설하였다. 2007년에 50대의 트럭만이 조립되었다.

러시아는 나진과 북한의 북부 지역을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횡단철도를 개설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것은 러시아 영토를 통해 중앙아시아 혹은 유럽 시장으로 발송될 수 있는 한국 및 일본 화물의 수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전체적인 양자 경제무역의 80%는 해당 지역구역간 물물교환으로 구성

된다. 북한과의 무역이 가장 활발한 러시아 지역은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이다. 해상 행정 구역(프리모스키 크레이: Primorsky Krai)은 1년에 4백만 달러 가치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하고, 대금 대신에 북한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는다.

시베리아와 극동의 북한 노동자 진출은 소련-북한 관계 시기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매년 3~5천 명의 북한인이 벌목공과 건설노무자로 일하기 위해 러시아로 입국하며 일부는 농업 및 해양업종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존재를 통해, 북한은 소련 때부터 이어온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였다. 소련시대에 북한은 약 8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아직 러시아에 되갚지 못하고 있다.

시장경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에 소련식의 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 러시아 재계는 북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관심이 없다. 러시아-북한 간의 경제 관계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빈약하다. 양자 간 무역은 5천만 달러 규모(2009년)에서 정체되어 있다.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1년과 2002년에는 북한 지도자가 두 번에 걸쳐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문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의 도출하지 못했다.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 경제적 연계 없이 러시아는 북한의 정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모든 잠재적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이것은 한반도의 일반적인 상황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의 전략은 북한 및 남한과 우호적인 근린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요소를 고려할 때 남한 및 북한과 같은 수준의 관계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러시아는 남한과 전략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어떤 제한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러시아-북한 관계는 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한계가 있다.

러시아에 있어 남한은 매우 중요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동적이고 유망한 국가이자 2010년 G20 정상회담을 개최한 G20 국가이다. 20세기 말 남한은 새로운 사업경제모델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해외무역을 확장시키며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외교관계 정상화 이후 20년 동안 남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 번째 경제 파트너가 되었다. 협력의 규모는 합작투자 사업에 특별한 역점을 가지고 지속하여 확장하고 있다(러시아 경제에 대한 남한 투자의 누적 규모는 2009년 15억 달러에 달한다).

러시아에 있어 최고 우선순위는 극동을 발전시킨다는 목표와 함께 지역 내 안정과 발전, 경제적 이익의 증진이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1992년 11월 서울 방문 중에 한국과 러시아 간 기본관계 조약을 서명하였으며 당 조약에는 양국이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



를 공유한다고 명기되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시, 러시아와 한국은 양국 관계를 '동반자적인 상호보완 관계'로 규정하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시 양측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2008년 9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 러시아-한국 관계는 포괄적 동반적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번 더 격상되었다. 이 합의의 의미는 양국이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 간 관계를 지역적 그리고 전 지구적 범위로 다각화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제 양국 협력은 정치, 외교, 군사, 안보와 경제 및 문화 영역 또한 포함하는 확대된 영역을 포괄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기간에 에너지 자원, 정보기술(IT),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산업 및 원자력, 금융, 해양개발과 같은 산업과 고급 기술에 관한 협력을 망라한 26개의 문건이 서명되었다. 또한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주요한 국제적 사건, 한반도, 동북아와 전 세계 상황에 대한 의견과 시각을 교환하고 정부, 의회 간, 그리고 공공 및 민간분야 수준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확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와 한국은 국제정세와 국가 안보에 관한 최초의 차관급 전략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2007년 5월 모스크바에서 처음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국제정세와 국가안보에 있어 진일보한 협력을 촉진시키고, 한반도와 세계의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계획에의 참여를 통해 한국에 유라시아 지역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은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2005년 11월에 체결된 경제와 무역 협력을 위한 '행동 강령'은 인상적으로 증가된 양측의 무역규모와 투자의 배후이다.

2008년 9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결과로 양국은 러시아 기계, 기술 장비,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량 증가와, 경제 및 무역 협력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역구조의 개선에 합의하였다. 심도 있는 경제 협력을 위한 민간부문 차원의 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면서, '한국-러시아 비즈니스 대화'와 여타 지역 수준의 회담을 확장하고, 경제 및 무역 협력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양국 간 경제협력이 양측이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은 완전히 명백하다.

러시아-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밝은 전망이 있는 반면, 발생할 수 있는 제한사항 또한 언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치 및 군사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동맹이다.

만약에 러시아-미국 관계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적인 측면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러시아-한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 영향이 실질적인 러시아-한국 협력에 급격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긴 하지만, 러시아-북한 관계의 상태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한 전술, 즉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것에 한해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소련/러시아와 한국 간 관계에서 역사적 과거와 연관된 문제도 있으며, 이는 현 러시아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한국인의 정신에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남겼다. 따라서 양측이 체계적으로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및 일반 시민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심화시키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3. 한국 통일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과 러시아-한국 간 전략적 협력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실익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이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안보 및 발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안보 영역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신뢰관계를 쌓아왔는데, 이는 러시아가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다룸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을 더 효과적이고 일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한국이 더욱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 지역적, 그리고 전 세계적 국제 정치의 영역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기회를 한국에 제공해준다.

경제적 발전과 현대화와 관련하여서 러시아는 ‘2013 극동 및 자바이칼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의 진전에 있어 가장 적합한 협력자로 여겨지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관심이 있다. 러시아는 또한 공급선의 다양화를 위해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하는 한국에 있어 러시아와의 관계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러시아와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장은 동북아와 다른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러시아는 한반도상에 현존하는 정치 군사적 모순과 충돌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3대 신 실크로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선보였다. 첫 번째는 '철강 실크로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국 횡단철도의 연결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실크로드'- 북한을 지나는 유류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이다. 세 번째는 '그린 실크로드'- 극동의 농업과 임업에의 협력이다.

러시아 측은 이를 지지하였다. 러시아는 이미 철도 연결 프로젝트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가 한반도의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수송 및 물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러시아는 두 번째 프로젝트 또한 선호하여 북한 영토를 가로지르는 유류 및 가스 파이프라인을 개설하는 데 동의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 가스 프롬 사는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동 사업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은 러시아로부터 한국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20%를 30년 동안 공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천연가스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또한 수입단가를 낮추게 될 것이다.

'3대 신 실크로드' 사업은 오직 남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통일 과정의 전제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성사될 수 있는 수많은 주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국의 철도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러시아 영토 하산(Khasan)으로부터 북한의 나진항에 이르는 철도를 건설하여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을 수송하는 계획이 있다. 또한 한반도를 아우르는 천연가스 공급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북한 영토에서 한국을 가로지르는 전력선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러시아는 남한과 북한 간 대화와 협력을 지지하며,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ARF와 APEC 포럼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비확산 조약 강화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양국은 국제 테러리즘, 국제 범죄, 기후변화,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해적 문제 및 사이버 범죄와 같은 전 지구적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한국 양국 간 및 다자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공유한다.

가장 유망한 협력 분야는 산업, 과학 및 기술에서의 협력이다. 양측은 공동 연구를 위한 전문가의 교환, 심포지엄, 공동 연구그룹 및 기관의 설립, 기술 정보, 문건 및 연구 결과의 교환을 증진시키고 있다. 양국은 나노테크놀로지, 원자력, 우주 개발과 같은 특정 분야

의 협력도 활성화하고 있다. 우주 개발에는 이미 중요한 성취를 거두었다. 한국의 첫 우주인 프로젝트의 성공이 그 사례이다. 또한 모스크바 지역 인근 한국 기업을 위한 전용 산업 단지 및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한국 선박 전용 항구의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현 교역체제는 북한이 노동력과 농산물을 수출하고 러시아가 전력과 우류 및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것이다. 3자 협력의 개념은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원, 북한의 영토와 노동력, 그리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북한 경제의 재건과 현대화, 소득원 창출, 그리고 한반도에서 경제적으로 통합된 체제의 발현을 이끌 수 있는 남북한 협력과 남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적 유대강화이다. 송유관, 가스 파이프 라인, 철도의 건설과 이들의 이용,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의 러시아, 한국, 북한의 협력은 한국과 북한의 화해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VII.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 Ⅶ.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박영호(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1. 서론

2010년 현재 한국의 명목 GDP는 세계 13위, 무역규모는 약 8,930억 달러로 세계 9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2010년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2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쟁력은 G20 국가 중에서는 7위,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9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8위를 기록하였다.<sup>74)</sup> 이처럼 한국은 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6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국력을 쌓은 중견국가로 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신흥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한 사례다.

한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또 지구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K-POP, 한류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를 신장시키면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세계 속의 코리아(Global Korea)’를 기치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 구조는 한국의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를 성취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적 장애요인으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면서 피로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폭력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한, 분단 상황은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의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21세기에 국가적 및 민족적 차원에서,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에서 계속하여 대결의 상태에

74) 지식경제부, 『2010년 수출입 실적 및 평가』, 2011년 1월 1일;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http://www.imd.org/research/publications/wcy/World-Competitiveness-Yearbook-Results>>.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 나아가 인류의 공동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통일문제를 진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통일은 한국이 세계 정치·경제 및 안보 질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한반도의 현상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 4국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한국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정립하여 주변 4국과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원활한 통일 추진을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이해 조정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 인도적·정치적·군사적 개입문제, 난민 구호문제,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처리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통일비전과 통일 미래상을 제시하고, 주변 4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분석한 후, 한국의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지지와 협력을 획득하기 위한 통일외교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 2. 한국의 통일 비전과 통일 미래상

### 가. 21세기 한국의 국가 비전: '선진일류국가' 실현

통일 비전의 실현을 위한 국내외 환경 변화를 전망해 보면, 우선 체제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는 결국 불가피하며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의 대내외 위상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꾸준히 증대할 것이며, 국제적 차원의 통일 환경은 가변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장기적인 국가 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로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며, 그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 되었고, 2009년에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원조공여국이 되었다.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을 바탕으로 선진화를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

여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일류국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안보 비전은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는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되었다. 한국은 선진일류국가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균형적인 복지의 실현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국가로서 세계 속에 더욱 진출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성권력(soft power)의 증대가 요구된다. ‘성숙한 세계국가’로의 발전은 경성권력(hard power)과 연성권력의 종합체인 스마트파워(smart power)가 강건하게 밑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에 분단 구조를 극복하고 통일 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고한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21세기 한국의 국가 목표는 ‘선진화와 통일’이며 선진일류국가의 실현은 구체적으로 선진화와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통일은 형식적 차원에서는 ‘정치·제도적 단일 주권국가의 수립’을 의미하며, 내용적 차원에서는 형식적 차원의 통일뿐 아니라 ‘가치·절차·규범이 제도화된 정도’를 의미하는 통합의 수준을 포함한다. 다만, 통합은 통일 이전에는 물론 통일 이후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 나. 통일의 미래상

필자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달성 목표로서 ‘G8 선진일류국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이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하는 아시아의 중심국가(Asian Hub)’를 비전으로 제시한다. 그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Asian Hub: Bridging World’s Peace and Prosperity”이다. 이러한 비전 아래 세부 비전은 ‘풍요로운 한국, 자연과 어우러진 한국, 평화로운 한국, 멋진 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공동체 통일구상’과 접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공동체’의 실현으로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수준’의 국력을 달성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경제공동체’의 달성으로서 ‘G8 수준’의 경제 선진 국가가 되는 것이다. 셋째,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OECD 상위 수준의 문화 복지 국가를 달성하는 것이다.([그림 VII-1]).

[그림 VII-1] 통일 비전 : G8 선진일류국가



## (1) 선진민주국가: '풍요로운 한국'

선진민주사회란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선진일류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공동체적 자유가 향유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구현되며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인 동시에 G8 수준의 경제적 선진 국가를 의미한다.

## (2) 평화·번영의 모델국가: '평화로운 한국'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통일이행이 실현된다면 민주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동시에 성취한 모델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및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비핵·평화국가로서 세계적 비핵산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의 해소는 군축으로 이어져 국제 평화를 추동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견고한 평화를 위한 평화촉진자 및 평화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 및 발전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제 평화질서 조성을 위한 적극적 참여국가로서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준의 세계 평화 기여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3) 녹색성장국가: ‘자연과 어우러진 한국’

남북 경제통합의 효과로 지속적인 발전 속에 미래성장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의 통합은 고용 및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 후 한반도는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인구 6억 4천만, GDP 7조 달러의 동북아시아 시장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 교통망과 대륙교통망(TCR, TMR, TSR)의 연결 및 태평양 항로의 연계로 동아시아 및 세계적 물류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또한 녹색 한반도의 실현으로 친환경적 균형발전과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녹색 성장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세계의 녹색성장의 미래 발전 모델이라 할 수 있다.

(4) 창조적 문화국가: ‘멋있는 한국’

통일한국은 새로운 국가건설의 활력을 가져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사회·문화적 동태성을 높이며 국민적 긍지와 자존심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국가는 새로운 국민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문화의 중심지로서 개방적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성권력(hard power: 경제력, 기술력, 국방력 등)과 연성권력(soft power: 문화, 가치체계, 정보망, 제도 등)을 결합한 종합국력이 신장될 것이다. 그리고 OECD 상위 수준의 창조적 문화와 소프트파워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표 VII-1] 세계 주요 국가의 GDP 추정치: 2010~2050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통일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2010	14,537	4,696	4,602	1,378	1,127	1,395	2,366	3,086	1,927	2,568
2020	17,981	12,676	5,222	2,562	2,153	1,708	2,815	3,522	2,238	3,129
2030	22,821	25,652	5,812	4,269	3,509	2,071	3,306	3,764	2,407	3,627
2040	29,827	45,019	6,040	6,316	5,028	2,581	3,892	4,391	2,576	4,383
2050	38,520	70,605	6,675	8,564	7,167	3,164	4,592	5,028	2,969	5,178

자료: Goldman Sachs, *BRICs and Beyond* (November 2007), p. 149. 통일한국의 GDP는 Goldman Sachs의 GDP 추정치 근거에 의해 계산함.

### 3. 주변4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 가. 미국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당사자 원칙’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가 한반도 전체에 확산되는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21세기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향후 한국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 안보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 동맹관계에 따른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은 한국의 입장에 따라서 주둔 또는 철수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 이후 통일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철수가 가능하다. 미국은 한반도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안보전략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결정하여 왔으며,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여부, 규모 등은 항상 한·미의 긴밀한 협의사항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점진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지하나, 북한 급변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특히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한반도 이외 지역 및 테러 집단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따라서 체제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통일한국이 친(親)중국으로 경사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다만, 통일한국의 국제정치적·경제적 위상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관계 조정 및 역내 주변국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정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나. 중국

중국이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남북한에 의한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그리고 점진적 과정을 통한 통일이다. 중국이 말하는 자주적 통일이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자국의 국익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무력충돌 발생 시 한반도 불안정이 고조되고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란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불안정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점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중국의 국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 통일을 우려하며, 그러한 통일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중국 국내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한반도 통일 이후 조선족의 친한(親韓)화 경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에게 분리·독립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될 경우, 이를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중국보다 일본에 더 우호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향후 더 실용주의적이며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중국 지도부가 등장하고 북·중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금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미·중 간 국력격차가 더 좁혀지고 중국의 패권 추구 외교가 강화되는 경우,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상대적 힘의 약화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하면 표면적인 입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통일에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 다. 일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인 이해관계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 및 번영을 저해

하지 않고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반일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 이에 대한 대응이 한반도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온 것을 볼 때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일본의 대한반도 인식 및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일본의 주된 관심은 한반도 통일 그 자체보다는 긴장완화에 있다. 따라서 역대 일본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었다.

한반도 통일방식에 대한 일본의 기본입장은 ‘당사자 원칙과 평화적 방식’이지만, 유동성을 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과 대북 및 통일정책을 지지해 왔으며, 통일의 당사자 원칙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사실상 지지해 왔다. 다만,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초래될 수 있는 지역의 불안정보다는 현상유지를 보다 중요한 국가적 이해관계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북핵문제를 계기로 냉전기에는 거의 주목받지 않았던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한반도 급변사태의 발생을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추진과정은 다자간 협의구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① 통일은 군축과 비핵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②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자협약이 필요하고, ③ 통일 한반도가 동북아지역에서 가상 위협요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핵문제가 해결된 통일을 선호할 것이다.

## 라. 러시아

러시아는 한반도가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되고, 통일한국이 반러시아 동맹을 맺지 않는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통일 상황이 오는 경우 러시아에 우호적인 통일한국이 등장할 것을 위해 적극적 관여가 예상되는데, 이 경우 한반도 통일 시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중국, 일본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 국가의 부상을 의미하므로 미국, 중국,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만이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며, 미국의 지원에 의한 한국의 북한 흡수통일보다는 분단 상태를 선호하고 있다. 러시아는 친미·반중 성

향을 띤 통일한국의 등장은 ‘동방의 NATO’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의 러시아 접경지역을 자국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으로 간주, 친미·반중의 통일한국이 등장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통일 시기와 관련 현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가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통일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일의 방식으로는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 4. 통일을 위한 외교의 기본 방향과 전략

##### 가. 기본 방향

첫째, 한반도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서 남북한이 당사자로 주도해야 함을 선언한다. 남북한 당사자 논리는 다음과 같다. ① 정치적, 법적으로 남북한이 당사자이다. ② 역사적으로 남북한의 분단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반해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③ 국제정치적으로 주변 4국 및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의 남북 당사자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④ 문화·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역사를 유지하였으며, 남·북한의 주민은 동일한 민족성 및 전통문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둘째, 통일한국은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틀’ 속에서 추진하여 달성한다. 한반도 통일의 추진은 한반도의 이익 뿐 아니라 주변 4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강건한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공동경제번영에 기여한다. ‘先 한반도 통일 後 동아시아 평화·번영’이 아닌 ‘동아시아 평화·번영 속의 한반도 통일’을 추진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국제적 협약 체결을 고려한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확고한 G2시대의 등장을 고려할 때, 통일외교는 미·중간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축에서 중국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넷째, 동북아 다자안보 및 경제협력체 건설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통일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한국은 북한과 주변 4국 간,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형성되는 다층적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복합적인 연결망 외교(networking diplomacy)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한국의 구체적 이미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발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의 비전과 품격,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국가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의 통일한국 추진을 위한 비전으로 “Asian Hub: Bridging World’s Peace and Prosperity”를 제안한다. 그 추진 기치로 ‘Korea: Leading the Future’를 제안한다.

## 나. 전략

첫째,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소프트파워 전략을 구사한다. 한국은 ‘경제발전 및 민주화 모델’로서 통일한국의 등장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이어 평화를 달성한 모델이 된다. 세계적으로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의 현대 대중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파워의 활용을 통해 한반도 통일로 수립될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아시아,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와 경제 번영에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둘째,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추진한다. 통일의 교는 평소부터 신뢰와 협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 양자 차원에서 지도부 및 정책 당국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 간 및 민간 차원에서 형성·가동되고 있는 ‘전략 대화’ 채널을 정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보화, 세계화의 진행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시공간이 압축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과 유엔 산하 기구, 국제기구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미래, 통일 비전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지구적·지역적 규범체계를 총동원하여 국제규범 속에서 북한 문제를 정의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강대국과 약소국 간 가교(架橋)역할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한다. 한국은 중견 국가의 위치를 활용한 소프트파워와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통해 G20과 비 G20 간의 가교(bridge)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사이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선진국과 신흥국 등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 상충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규범을 형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 컨센서스’와 같은 국제 거버넌스의 새로운 플랫폼(platform)

을 형성하는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다섯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확대 전략을 구사한다. 핵문제,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북한문제는 국제적으로 정책 커뮤니티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 NGO 등의 주요 논의 의제가 되었다. 기존의 공공외교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공공외교뿐 아니라 국내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외교를 확대·강화하여 민·관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여섯째, 통일외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통일외교는 북한 실정과 통일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과 지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민·관간의 통일외교 협력을 기획·조정하는 가칭 「통일외교센터」를 설립한다.

## 5. 한반도 주변 4국 협력 유도 방안

한반도 통일에 대해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이 각국의 이익에 기여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증진과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의 손을 내밀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주변 4국의 국가이익을 공유시키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에 세계 평화와 발전의 모델로 각인되어야 한다.

### 가. 미국

통일한국은 미국의 국가이익 및 전통적인 가치를 아시아 지역 및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델이며, 통일한국은 이에 더하여 국제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모델이다. 통일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새로운 안보위협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는 것(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처럼 미국의 세계 질서 지도력 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비확산체제 유지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한국은 비핵·평화국가로서 세계적 차원의 비확산체제의 모델이자 적극적 평화 구현의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동아시아 지역 강대국 간 역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평화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미 전략동맹

관계의 유지 속에 통일한국은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또 통일한국은 중국의 ‘패권국가’화와 그에 따른 ‘수직적 중화주의’ 국제질서의 등장을 예방하고, 호혜평등의 수평적 평화질서 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가교국가로서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NATO 동맹의 유지처럼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의 기본 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통일과정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의 협력 속에서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한·미동맹 유지는 미국의 미·일동맹, 미·호주동맹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양자동맹의 유지를 통한 전략적 협력의 보루이다. 통일한국은 한·미 FTA, 한·중·일 FTA, 한·러 경제동반관계 발전 등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경제번영을 이끄는 경제번영의 촉매제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나. 중국

한국의 통일 추진은 한·중 간 정치·안보적 신뢰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진행되며, 중국의 전략적 우호관계의 기반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등장은 동북아 평화와 경제번영에 기여하고 중국의 국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중국과 평화적으로 협력·공존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등장은 중국의 경제이익 등 장기적인 현대화계획 추진 전략의 완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즉 중국이 바라는 안정적·평화적 주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 촉진의 계기가 되며,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아공동체 건설에 긍정적 전기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기존의 북한지역과의 국경선을 존중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존중할 것이다. 통일 이후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의 시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다. 한·미관계가 보다 균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한·중 군사협력 강화가 가능해져 한·중 간 군사적 신뢰·협력이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등장은 한반도의 안보위기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가 병행 발전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다. 일본

통일한국은 한·일관계의 발전에 따라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적 협력’ 관계의 기

반 위에서 양국의 관계 도약의 기반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일본과의 협력으로 중국의 ‘수직적 동아시아 질서’를 중화(中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통일한국 추진과정에서 한국·일본·중국이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동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등장은 일본도 바라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실현하는 길이다.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와 평화창출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외교·안보 협력 면에 있어서 통일한국은 일본에게 가장 우호적인 근린 국가가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며, 이는 일본이 추구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이니셔티브 발현의 장이 될 것이다. 나아가 통일한국과 일본 간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은 중국의 ‘수직적 동아시아 질서’를 중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동아시아 전역의 상생과 공존공영의 계기로서 통일한국이 등장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한국은 일본의 ‘동북부흥 뉴딜정책’의 진정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의 첨단기술 산업의 동등한 선두주자이자 선의의 경쟁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등장은 일본이 구상하는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통일한국의 등장은 일본과의 갈등요소를 해결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단초가 마련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종래의 대중문화를 대표했던 한류를 남북한 전통문화와 결부된 새로운 대중문화로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의 강국으로서 통일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전 세계적으로 동북아시아 문화의 적극적 발신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 라. 러시아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 안정 유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유라시아 연결의 중심국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아태경제권 편입, 동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의 본격화 등 러시아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한국 추진과정과 등장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한반도 접경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동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등장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베리아 유전 및 지하자원 개발, 유라시아 연결 철도 및 가스관 등 수송망 개발의 본격화로

러시아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가 현대화 등의 국가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극동지역에서 18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은 러시아 국경접경지의 잠재적 분쟁지역이 안정지역으로 전환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국가목표 달성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을 계기로 TSR-TKR 연결이 자연스럽게 실행되어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부산-서울-원산-하바로프스크-시베리아-모스크바-프라하-프랑크푸르트-파리)해주는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럽과 동북아 지역 간의 인적, 물적 이동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오래 전부터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 노동력, 투자의 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이 지역의 개발을 본격화하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 6. 결론

한반도 통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분단국가 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후 체제의 종막과 새로운 국제 평화질서의 상징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로 등장할 새로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아시아,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와 경제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등장이 가능해지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및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의 수행이 기대된다. 또한 통일한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번영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분단으로 완성하지 못한 ‘민족통합’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서는 선진일류국가 실현이라는 21세기의 국가비전을 달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오랜 분단 기간 소모적인 경쟁으로 낭비되었던 남북한의 국가능력을 결집함으로써 지구화 시대에 부응하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민주적 평화를 달성한 하나의 통합 국가를 등장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통일외교는 바로 이러한 미래의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통일한국을 등장시키려는 노력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외교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가 더욱 국제

화되고 지구화·정보화의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뒤늦게나마 통일외교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되었다. 통일외교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을 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국가발전 전략을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공생 발전의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 저자이력

### 배정호 |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배정호 박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의 국내정치와 외교안보정책, 한국의 대북 및 통일정책, 동북아 국제정치 등이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동경대학교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4국 통일외교전략』(공저, 2010), 『NPT체제와 핵안보』(공저,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공저, 2010),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공저, 2009),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나남, 2006) 등 다수 있다.

### 염돈재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염돈재 박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비서관으로 북방정책의 입안과 공산권과의 수교교섭에 핵심 실무역할을 담당했고, 1990년 6월 비밀교섭을 통해 한·소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독일통일 직전에 주독일대사관 공사로 부임하여 독일통일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해외담당)을 지냈다. 주로 국가정보, 국가안보 및 독일통일에 관한 연구 및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2010), 최근 논문으로는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과 국가정보의 과제”(2011) 등이 있다.

### Ralph Hassig | 북한문제 전문가, 심리학 박사

Ralph Hassig 박사는 북한문제를 전공하는 독립연구자이며 메릴랜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겸임 교수로서 사회심리학, 조직행동론, 정치심리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Dr. Hassig은 Albion 대학에서 심리학 학사, UCLA에서 사회심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고,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마케팅으로 MBA를 취득하였다. 그는 Albion 대학, 조지 메이슨 대학, 메릴랜드 대학과 국외 다수 기관에서 심리학을 가르쳐왔다. 그는 또한 남가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저서로는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2000)와 *The Hidden People of North Korea*(2009) 등의 공동저작이 있으며, 북한관련 최근 논문으로는 “Kim Jong-un Inherits the Bomb”(2011) 및 “North Korea in 2009: The Song Remains the Same”(2010) 등이 있다.



#### Kongdan Oh | 미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공단 박사는 미국 국방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며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의 객원연구위원이다. 오 박사는 랜드(Rand) 연구소의 전임 정치학 분과 멤버이자 여러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강의해왔다. 또한 대외관계평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 의회 산하 평화연구소(USIP) 한국 담당 작업 그룹, 아태지역 안보협력평의회의 미국위원회에서 활동중이다. 오 박사는 워싱턴의 한국클럽의 공동창설자이자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주립대(UC Berkeley)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오 박사는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2000)와 *The Hidden People of North Korea*(2009) 등의 공동저작이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는 “The United States between Japan and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June 2010 및 *Military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DA 2011) 등이 있다.

#### Takashi Inoguchi | 일본 니가타현립대학 총장, 동경대학 명예교수

이노구치 박사는 동경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유엔대학 부학장, 아시아태평양대학교류기구(UMAP) 사무차장, 일본국제정치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치이론, 비교정치, 동아시아정치, 국제관계론, 국제안전보장, 국제정치경제이다. 이노구치 박사는 *American Democracy Promotion*(공저, 2000), *Reinventing the Alliance*(공저, 2003), *Political Cultures in Asia and Europe*(공저, 2006), *Federalism in Asia*(공저, 2007) *Globalization, Public Opinion, and the State*(공저, 2009) 등, 관련 분야의 약 85편이 넘는 저서를 출판하였고 다수의 영어와 일본어 논문을 출판하였다. 이노구치 박사는 일본 학술회의 위원이면서 *The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및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의 편집인이다.

#### You Ji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사회과학 및 국제학대학 부교수

여우지 박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사회과학 및 국제학대학(The School of Soci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부교수이다. 북경대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유학하기 전, 다년간 중국 정부기관에서 근무했다. *Armed Forces of China*를 비롯한 세 권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그 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최근 논문으로는 “Hedging Opportunities and Crises against Pyongyang’s Hereditary Succession: A Chinese Perspective”(2011), “The Evolution of Beijing’s Military Strategy toward Taiwan”(2011), “China’s Response to the Deadly Triangle: Arms Race, Territorial Disputes and Energy Security”(2010), “Friends in Needs or Comrades in Arms: Sino-Russo Military Cooperation”(2010) 등이 있다. 여우지 박사는 *China Journal*, *Provincial China*, *East Asia Policy*, *Asian and Middle East Studi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의 편집인으로 활동 중이다.

## Alexander Panov |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파노프 박사는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을 졸업하였다. 관련분야 약 50여 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The Diplomatic Service of Japan”, “Post-War Reforms in Japan, 1945~1952”, “From Mistrust to Trust”(in Japanese), “It is Clear after the Storm”(in Japanese), “Russia and Japa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elations in the late 20th-the early 21st Century” 등 다수의 관련 저술을 출판하였다.

## 박영호 |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영호 박사는 미국 신시내티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2007), 21세기 정치학회 부회장(2009)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미국외교·안보정책, 북한 인권 및 인권과 국제정치, 북한정차외교·안보정책 등이다. 주요 저술로는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2010), “The Helsinki Proces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2009), “북한의 급변사태와 개발지원”(2009), 『한반도 통일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공저, 2008),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2006) 등이 있다.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2,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제1차 사이버 인권포럼-북한인권 실상과 개입방안		8,500원

###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上)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中)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下)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이상연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 - 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캐스린버티니, 린리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김석진, 김정수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사례	이중무, 김태균, 송정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남경민, 임을출	9,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헌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임강택, 임순희, 정영태, 김진하, 한기범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이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Studies Series		비매품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기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